2011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일시 : 2011년 4월 29일(금) 13 : 00 ~ 17 : 00
- 장소 : 목포대학교 플라자60관 소강당
- 주최 : 한국아동권리학회

모시는 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비준 20주년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협약비준을 통해 모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은 무한한 가능성과 가변성을 지닌 발달단계에 있습니다. 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다양한 문화권의 아동과 장애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 법과 정책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과 장애로부터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학술대회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아동권리학회는 한국의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4월 29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김경희

□ 춘계학술대회 일정 □

12 : 00~13 : 00 아동권리연구 포스터 발표 및 춘계학술 대회 등록

제1주 사회 : **심국경** 교수(국방여자대학교)

13 : 00~13 : 20 개 회 식

환영사 : **김경희**(한국아동권리학회장)

축 사 : **고석규**(목포대학교 총장)

축 사 : **배양자**(보건복지여성국장)

13 : 30~14 : 00 기초강연 :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20주년의 어제와 오늘**
박동은(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제2주 사회 : **김영호** 교수(경기대학교)

14 : 00~14 : 30 주제발표1.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김용화교수(숙명여자대학교)

14 : 30~15 : 00 주제발표2.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은주교수(동국대학교)

15 : 00~15 : 20 휴식

15 : 20~15 : 50 주제발표3.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김윤태교수(우석대학교)

15 : 50~16 : 20 주제발표4.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16 : 20~17 : 00 <종합토론>

좌장 : **우남희**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송 순 교수(원광대학교)

이경희 교수(강원대학교)

안영하 교수(목포대학교)

17 : 00~ 종합정리 및 리셉션

차 례

〈주제발표 1〉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김용화 교수(숙명여자대학교) 5

〈주제발표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은주 교수(동국대학교) 29

〈주제발표 3〉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김운태 교수(우석대학교) 49

〈주제발표 4〉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57

〈종합 토론〉

토론 자료 1 송 순 교수(원광대학교)

토론 자료 2 이경희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자료 3 안영하 교수(목포대학교)

〈포스터 논문 발표〉

◆ 기조강연 ◆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20주년의 어제와 오늘

박 동 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 주제발표 1 ◆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 정책적 대안

김 용 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김 용 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I. 서론

天賦 不可讓의 권리인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다. 따라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도 인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집단의 인권은 형식적 보장에 그쳐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여성인권, 아동인권, 장애인 인권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집단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숫자에 따른 구별이 아닌 차별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¹⁾ 이 중에서도 아동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대표적인 집단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그 특성상 미성숙²⁾하여 일정기간 절대적인 의존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호란 약자를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아동은 인권 및 기본권의 기본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능력 및 수단은 인권으로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20세기 초 국제사회에서 시작되어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 이하 ‘아동권리협약’으로 칭함)을 탄생시켰고 이로써 차세대로 인류의 영속성을 이어 나갈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범세계적으로 요구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아동권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내용이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선언적 또는 프로그램적 이거나 요보호 아동 등을 위한 아동관련 시설운영에 관한 지침적 규정이 많아 실질적인 아동권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관련법-특히 기본법을 중심으로-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법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 사회의 선진화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하여 나타난다.

II. 아동권의 개념과 내용

1. 아동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권리로 남녀노소, 인종, 민족, 장애, 성적 지향 등 외

1) 박홍규,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21세기북스, 2010, 98면 참조.

2) ‘여기서 미성숙’은 성인과 비교하여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아동만이 갖는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아동은 성인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동과 성인을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김정래, 2002).

형적으로 구분되는 어떠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 인간 모두의 권리를 말하며, 여기서 권리란 권익을 향유하도록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말한다. 그렇다면 아동³⁾의 권리, 즉 아동권은 법에 의하여 아동(개인 또는 집단)에게 인정된 활동범위 및 자격 또는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이 예상하고 있는 인간상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의 주체로서 그리고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주체로서 사회공동생활을 책임있게 형성해 나가야 할 자주적 인간,⁴⁾ 즉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을 지칭한다.⁶⁾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아동은 자주적 인간-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국민이다. 따라서 아동은 일반 국민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다른 계층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권리 주체로, 단순한 자선이나 박애의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이다.⁷⁾ 현재 우리나라 18세 미만의 아동은 전체 인구의 약 22.57%를 차지하고 있다.⁸⁾ 이들이 인권 및 기본권의 주체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는 법으로 마땅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 아동권의 내용

최고규범인 「헌법」은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 권리 또한 보장된다.⁹⁾ 아동권 역시 일반적 기본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 국가구조권, 제31조 교육권, 제32조 근로권, 제34조 사회보장권,

3) 아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만이 계속되고 있을 뿐 실정법상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나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즉 아동이라는 용어는 헌법은 물론 많은 실정법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준연령도 다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만18세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할지,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연령기준으로 나누어 재정의할지, 청소년 범주에 아동이 포함된 개념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요구된다. 이는 아동 관련법간의 규정간 충돌 및 공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법제와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은 분리된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연령으로 하여 관련법들의 입법취지에 따라 아동의 일반적 권리 주체와 복지대상으로 구분하여 용어 및 연령 통일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동 및 청소년을 병렬하여 표기함으로써 용어 통일과 아동 및 청소년의 지위와 그에 따른 특별보호를 통한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모두를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합하기에는 이미 많은 실정법과 정책이 이를 구분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연령불일치에 대한 문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이미 2차례(1996년, 2003년) 지적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병기/구별하지 않고 아동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

4)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9면 참조.

5)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 … 우리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인간상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인바….

6)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7) 전남련·김재환 공저, 아동복지, 형실출판사, 2006, 71면 참조.

8) 통계청, <http://kosis.kr>, 「연령별 전국(추계)인구」, 참조. 검색일 : 2011. 4. 21.

9) 우리 헌법은 전문과 본문130조 부칙 6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총강 : 제1조-제9조 / 권리와 의무 : 제10조-제39조(30개조) / 국회 : 제40조-제65조(26개조) / 정부 : 제66조-100조(35개조) / 법원 : 제101조-제110조(10개조) / 헌법재판소 : 제111조-제113조(3개조) / 선거관리 : 제114조-제116조(3개조) / 지방자치 : 제117-제118조(2개조) / 경제 : 제119조-제127조(9개조) / 헌법개정 : 제128-제130조 (3개조)로 민주주의 핵심인 평등과 같은 내용은 간단히 언급된 반면, 현실정치의 권력구조에 대한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제36조 제1항, 제2항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및 모성보호 등은 특히 아동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이 일반원칙,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과 관련된 권리,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초보전 및 복지권, 특별보호조치,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권 등이 있다.

<표 1>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 내용

조문	내용	유형
제1조	아동의 정의	
제2조	무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일반원칙
제4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등의 조치	
제5조	부모 등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지도권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6조	생존과 성장 발달권	일반원칙·기초보전 및 복지
제7조	출생신고·성명·국적 취득권 및 부모에 의해 보호 및 양육받을 권리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8조	신분을 보유할 권리	
제9조	부모와 별거당하지 않을 권리	
제10조	출입국의 권리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11조	해외로 불법 이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12조	의사표명권	일반원칙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16조	사생활의 자유	
제17조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제18조	부모의 일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기초보전 및 복지
제19조	부모 등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21조	입양시 보호받을 권리	
제22조	난민 아동의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	특별보호조치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24조	건강 및 의료에 관한 권리	기초보전 및 복지
제25조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정기적 검진받을 권리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26조	사회보장 수혜권	기초보전 및 복지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29조	교육의 목적	
제30조	소수민족 및 원주민 아동의 문화에 대한 권리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31조	휴식과 예술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	
제32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3조	마약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4조	성폭력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특별보호조치
제35조	아동유괴 및 매매방지	
제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7조	고문·부당한 대우·부당한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민적 권리와 자유 특별보호조치
제38조	무력충돌시 보호받을 권리	특별보호조치
제39조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특별보호조치
제40조	형사절차상의 보호받을 권리	특별보호조치

Ⅲ. 아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분석

실정법상 아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은 많으나, 본 장에서 헌법, 민사법, 형사법, 그리고 복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동법들이 아동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기본법 규정 중에서 아동권과 충돌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헌법

최근, 「헌법」에 ‘아동’ 수용 등에 관한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다. 즉 「헌법」에 아동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아동권의 헌법적 수용을 주장하는 논거는 아동의 권리주체성 및 구체적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천명하는 상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적극적인 국가책무를 촉구할 수 있으며, 아동권이 「헌법」의 다른 중요한 법익과 마찬가지로 헌법적 법익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하위법은 물론 행정, 사법적 행위가 이에 기속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극적 입장은 「헌법」상 아동권을 규정한다하더라도 사회적 권리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다른 헌법적 법익만큼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 형식적 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아동권 규정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약자 집단을 고려하여야 공평하므로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권리에 관한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입법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부모 등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인데,¹⁰⁾ 아동에게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부모 등의 권리행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오히려 아동의 성장발달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으며, 「헌법」에 명시한다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수용할 지에 대하여는 의문임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규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 이러한 소극적 주장에 대하여, 아동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는 성인과 달리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및 발전정도에 따라 보호의 한계 및 자율의 범위가 결정되는 ‘성장 중인’ 존재로 자유와 책임을 가진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격 존중과 인격발전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배려를 요청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¹²⁾ 이렇게 「헌법」에의 아동권 수용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으나, 차세대 국민으로서의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가정과 국가의 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¹³⁾에 아동권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단, 현행 「헌법」의 청소년 규정과 새로이 규정할 아동권을 어떻게 조율할 지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헌법」 규정 중 아동권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10) 1923년 미 연방대법원은 Meyer v. Nebraska 사건에서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권리에서 파생(derivative)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아동의 권한은 부모의 권한에 의하여 한계가 설정된다고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부모의 권리에 의존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Meyer v. Nebraska, 262 U.S. 390 (1923), 변진석, 미국헌법상 아동의 권리, 안암법학, 2008, 107면 참조.

11) 김선택,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수용, 헌법의 아동수용추진을 위한 공청회, 헌법의 아동수용추진위원회, 2010, 32-33면 참조.

12) 김선택,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1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10, 387-388면 참조.

13) 이미 독일, 이태리, 스위스, 남아공 등 25개국은 헌법에 아동권을 규정하고 있다(김선택, 앞의 논문, 536-53면 참조).

1) 차별금지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일컫는다.¹⁴⁾ 이러한 차별에 대한 금지는 헌법을 위시한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성별·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물론 성별·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한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지 예시적으로 열거한 내용이므로 이것 이외에도 불합리한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예시로 적시한 내용은 다른 영역보다도 특히 차별발생 가능성이 큰 영역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연령이나 장애,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차별로 보고, 이러한 차별에서의 아동에 대한 무차별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성인간의 차별은 그 비교기준이 달라 차별여부를 논하기엔 한계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하고, 아동간-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혼인외의 자¹⁵⁾ 등-의 차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은 초중고 입학·전학에서의 직접 차별 및 교육권의 제한 등을 통한 간접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초중고 입학·전학시 차별·거부, 거절 등-을 받았다고 한 비율은 각각 26.1%, 19.4%, 16.8%이며,¹⁶⁾ 또한 장애아동의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부족(34.6%) 및 비장애아동(친구)들과의 소통부족(20.6%)으로 학교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등 간접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즉 장애아동은 장애정도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을 전담하는 전문교사의 부족과 교사의 이해부족,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로 교육권(수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비장애아동과의 소통이나 어울림 등이 어려워 학교생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무상확대(25.1%)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21.6%)등이 요구되고 있다.¹⁸⁾ 또한 장애인지원시설 이용과 관련, 장애아동과 장애성인의 욕구가 다르고 교육이나 재활 방식을 달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과 장애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취학전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보육시설은 전국에 170여개가 운영 중이나, 학령기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은 소수의 종교시설에서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 시설마련이 필요하다.

14) 두산백과사전.

15) 혼인외 자에 대한 차별은 신분상의 문제로 논 외로 한다.

16) 변용찬 외,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02-304면 참조.

17) 변용찬 외, 앞의 보고서, 245면 참조.

18) 변용찬 외, 앞의 보고서, 247면.

한편,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아동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하거나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며,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법의 간극은 상당하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고 실제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선결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재한외국인 아동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규정도 중요하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이 아동들이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등 학교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규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요구된다. 2006년부터 정부는 ‘다문화가정교육지원 대책’²⁰⁾과 「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는 물론 학과 외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들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정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정착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²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지자체나 NGO 및 해당교육기관에서 그 사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70%가 초등생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따라서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이 아동들의 초기 적응을 위해서 전담 학급설치나 전담 교사 배치 등의 적극적인 교육정책으로 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²³⁾ 하여야 할 것이다.

19)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 대한민국 정부,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2008, 32면 참조.

21) 실제로 불법체류자의 아동(자)의 경우 교육권에 있어서의 그 ‘권리주체성’ 여부에 대하여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교육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학교교육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 불법체류 아동(자)에 대한 취학 불허는 합법적 이주만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정당한 수단이 된다는 점, 미성년 자녀의 체류가 매우 짧은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가의 교육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점, 불법체류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교육권을 부정하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전제가 된다. 이는 국민이건 외국인이건 합법체류인지 불법체류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혜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008, 30-31면 참조. 같은 취지에서 현행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할지라도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김선택, 기본권일반규정의 개정방안연구,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107-108면 참조.

22) SBS, 2010-10-15자 New.

23) 경제적 목적이 아닌 결혼이주의 경우에는 이주민 본인이 아니라 그 2세대(아동)이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순혈주의’의 사고와 충돌하면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2세대(아동)를 출산하고

있다. 이렇게 출생된 아동(자)들은 모의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유아기에 언어발달장애를 겪고 있고, 피부색과 얼굴생김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과 학교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괴로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언어발달장애는 학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력중심 사회인 한국에서 성장하게 되는 혼혈 아동들은 대부분이 성년이 되어서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선영,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2007, 13면; 정혜영, 앞의 논문, 25면 참조.

2)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로 발현된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최소한을 의미하고, 그것은 자유로운 종교적 행사에 의하여 확대·강화되며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와 선교·종교교육의 확립 등으로 나타난다.²⁴⁾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도 종교교육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교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 기타 육성기관에서 종교교육을 시키는 것은 종교선전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자유선택이 아닌 추첨에 의해 학교가 강제 배정되는 입시제도하에서는 비록 종교이념에 입각 설립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 및 신앙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²⁵⁾ 현재 초·중·고교 중에 종교재단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에서는 학생인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 종교교육을 일반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아동의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2010년 4월 대법원은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²⁶⁾ 그러나 실제 일선 종교재단의 초·중·고교에서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어 아동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학칙을 통하여 아동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3) 교육권

교육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인권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학습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수한 교육이 있어야 독립된 인격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삶의 모든 시기에 필요하나,²⁷⁾ 특히 아동의 인간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교육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나 그 중에서도 교육의 시기 등으로 보아 아동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은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학교의 경우,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상교육의 범주이다. 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수업료만 면제된다는 ‘수업료 무상설’, 그 외에 교재·학용품의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용 무상설’ 등이 있으나, ‘취학필수비

2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481-483면 참조.

2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405면 참조.

26)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27) 박홍규, 앞의 책, 184면 참조.

용 무상설'이 다수설이며 또한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 교과서와 그 밖의 교재 그리고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²⁸⁾ 특히 무상급식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완전한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즉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무상급식을 100%로 확대시켜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측면과 선별적인 지원대상의 심리적 상처를 막기 위하여 모든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경에는 26%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하여 여당은 30%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가가 의무교육자 모두에게 완전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기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요구와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학부모의 부담 비율을 현재 보다 감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의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²⁹⁾

또한 교육권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체벌은 교육상 필요한 징계의 방법이라는 주장과 학생인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체벌은 형식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등 기본권에 정면 배치되어 학생인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⑦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를 개정하여, 동조 ⑧항에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간접체벌은 허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학교내 직간접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함으로써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수위를 달라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 법은 내용의 정당성과 절차의 타당성을 함께 요구한다. 상위법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는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하위법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 법은 사회변동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최저기준이 법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의 (직간접)체벌은 교육의 일환으로 미화되어 일반 학생의 인권을 상당히 침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서의 체벌은 마땅하다는 인식 또한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학생인 아동의 신체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직간접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징계나 처벌 등 후속적 조치를

28) 권영성, 앞의 책, 655면 참조.

29) 이덕난 외,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0, 11-35면 참조.

마련하여야 하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으로서 인간을 제압하는 것은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인권침해인 것이다.

2. 민사법

「민법」은 사적자치의 규율하는 법으로, 특히 아동(자)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와의 법률관계-친권-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친권관련 규정은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최대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아동(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면접교섭권

2005년 「민법」 개정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나, 이는 자(아동)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일방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아동)는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었다.³⁰⁾ 그러나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자(아동)에게도 면접교섭권(민법제837조의2)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자(아동)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 양육하는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즉 자(아동)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아동의 의견표명권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본인이 부모를 직접 만나고 싶을 때 또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고자 할 때, 부모간의 문제는 별개로 아동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아동 관련기관 등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의사표명권

친권상실절차나 이해상반행위시 특별대리인 신청에서도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직접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제102조). 또한 15세미만인 아동의 입양과 관련하여, 「민법」 제869조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갈음하여 입양 승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조치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신분변동에 대하여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아동의 의사표명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원칙을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15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모든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허가절차에서 아동에게 의사표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입양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민법」 제871조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할 뿐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규정도 없다. 따라서 모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에 대해서도 가

30) 이와 같은 현상은 분쟁적 양육권의 상황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즉, 이혼 등의 상황에서 양육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의 기준 역시 아동이 아닌 성인인 부모의 기준이 되고 있다. In re B.G.C. 496 N.W.2d 239(Iowa 1992) 에서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생물학적 부모의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In re Kirchner, 649 N.E.2d 324(Ill 1995) 사건에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적 부모의 양육권을 고려하였다. 변진석, 앞의 논문, 122-123면 참조.

정법원의 허가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³¹⁾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유보 조항으로 남아 있는 입양허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도 상당한 입법적 진전이 될 것이다.

한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15세이상인 아동을 입양할 때는 부모 등의 동의외에 당사자인 아동 자신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아동의 의사표명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명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³²⁾ 또한 최근 아동의 수혈, 수술 등에 있어서 부모의 종교적 신념 등으로 수혈이나 수술을 거부하여 아동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이는 친권남용으로 이에 따른 처벌이 따르겠으나, 아동이 생명을 잃은 후에 부모의 처벌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전적 조치로서 의학적 견지에서서의 판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3. 형사법

일반적으로 아동의 활동영역의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이다.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 가족 등과 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 유기, 학대 등도 발생된다. 특히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주변인들에 의해 발견된 다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자)훈육-가정교육-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져 상당히 소극적이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아동학대(신체적, 정신적, 성적)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는 미흡하다.

한편, 아동학대 중에서도 그 해악성이 가장 큰 것은 아동대상 성범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관련법은 있으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도 이를 제때 숙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전담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무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동대상 성범죄의 신고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수사과 재판,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인식하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한 범죄 방지 및 예방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³³⁾ 본 장에서는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 중 사회적으로 그 해악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아동포르노와 아동성매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포르노

1970년대 이후부터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착취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성인 대상의 포르노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해악

31) 이병희, 가족법, 법원사, 2006, 255면 참조.

32) 이병희, 앞의 책, 256면 참조.

33) 박은정, 아동성범죄 수사 및 재판실무, 젠더법학 제2권제2호, 한국젠더법학회, 2010, 37면 참조.

성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포르노란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가상으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아동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성적 부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아동포르노에 대하여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작·반포·배포·수출입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 칭함)」 제8조 제4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아동 포르노의 경우, 성인포르노와 달리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동포르노가 아동에 대한 성 학대(child abuse)/성 착취(child exploitation)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상의 아동포르노는 아동의 ‘성적 학대의 항구적 기록’이라고 불리만큼 그 화상이 일단 인터넷상에 유출되면, 가령 피해를 받은 아동 자신이 보호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상의 복제가 여기저기로 유통되어 회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아동의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범람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풍조를 조장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최근에는 고화질 화상의 고속 대량 유통, 피해아동의 저연령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이용의 확대, 신규 화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로 학대 화상을 배포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포르노가 아동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도 있었으나, 최근 안양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컴퓨터에 아동포르노 등 동영상 500여건과 수만 건의 음란물이 저장된 데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져³⁵⁾ 아동포르노가 아동 성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포르노의 위험성은 마약이나 총기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³⁶⁾

한편,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동포르노의 주요 제작국으로 보고되었다.³⁷⁾ 즉 우리나라는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아동포르노 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전세계 아동포르노 생산의 2.1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테러나 마약, 인신매매 및 성매매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아동 성범죄, 특히 아동포르노의 인터넷상의 거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아동포르노는 제작에서 유포·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유포하는 자는 주로 지하 사업자이며 최근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유포되는 경우도 있어 그 규모를 추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피해아동의 수나 피해정도에 대한 추정치도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아동포르노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이 아동포르노의 소지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34) 참고,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이하 앞의 논문1로 표기함), 영남법학 제3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99면 :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제2조(c).

35) [http : //www.sisakorea.kr](http://www.sisakorea.kr) 검색일 : 2011. 4. 9.

36) 참고, 앞의 논문1, 404-405면 참조.

37)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53면 참조.

반면, 「아동성보호법」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실제 아동을 등장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기술 및 인터넷의 발전은 실제아동을 출연시키지 않고도 가상/의사의 아동을 이용한 아동포르노 제작이 가능하다. 실제 피해아동이 없기 때문에 제작자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가상/의사의 아동을 이용한 아동포르노가 미치는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도 “동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 표현물을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입법은 그러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러한 표현물의 유포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그러한 가상 이미지 역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해석상 위헌 여부 판단의 문제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³⁸⁾ 아동포르노 시장이 오프라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가상의 아동포르노로 인한 실제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왕에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아동성보호법」은 실제 아동뿐만 아니라 가상/의사아동을 이용한 아동포르노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2) 아동성매매

2010년 1월부터 「아동성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아동을 대상 성 구매 행위는 성인(성인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과 달리 미수의 경우도 처벌된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아동이 성 매매되는 것을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Youth Keeper’를 운영³⁹⁾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휴대폰, 기타 방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 권유 및 유인하는 경우, 사이버검찰청에 신고하면 성 구매 미수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Youth Keeper’ 홈페이지에서 성매매 권유 및 유인 내용을 신고할 경우,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로 이관시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번의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아동 및 국민 대다수는 ‘Youth Keeper’가 실행 중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Youth Keeper’를 통해 아동대상 성구매 행위를 방지/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체계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Youth Keeper’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성구매 상습범 및 아동대상으로 성구매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것⁴⁰⁾ 등에 대한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영국의 한 단체가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성구매자의 행위를 억제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성범죄자로 공개되는 것(신상공개)으로 나타났다.⁴¹⁾ 이러한 조사에 비추어볼 때, 성구매자를 성범죄자로 간주하여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

38) 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가 27.

39) 2010.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여 운영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2010. 3. 19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다.

40)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여성가족부, 2007, 43면 참조.

41) [http : //www.eaves4women.co.uk/Resources/Reports_And_Consultations.php](http://www.eaves4women.co.uk/Resources/Reports_And_Consultations.php)(검색일 2011. 3. 6).

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대상 성구매자⁴²⁾는 동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가 아니어서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법 제33조 제1항의 등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도 (신상공개가 아닌) 성구매 대상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와 아동의 성구매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시급하다.⁴³⁾

3)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2008년도 보건복지부의 분석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684명 중 22.6%인 832명만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31.6%인 1,164명은 집행유예, 45.8%인 1,684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동대상 강간범죄자 중에서 66.3%인 412명만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그 중에서 5년이상 실형이 선고된 자는 23%인 143명에 그쳤다.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로 실형선고를 받더라도 5년이상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자는 14.3%인 16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도 범죄자 1,238명 중 354명(28.6%)에게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중에서 1년이상의 실형선고는 274명(22.1%)에 불과하였다. 한편, 13세미만인 아동에게 강제추행을 한 자 752명 중 211명(28%)만이 실형이 선고되었을 뿐이다.⁴⁴⁾

4) 관련법의 한계

아동대상 성범죄는 우선 「형법」에 의해 규율되나, 구체적인 대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성보호법」이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3항은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아동 성범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8조 아동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9조 아동 매매행위, 제10조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 제11조 아동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2조 알선영업행위 등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등만을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구별 실익은 없다할 것이다. 특히 아동포르노, 아동성매매 등에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의 폭행·협박이 없었다하여 아동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형태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하더라도, 공포감이나 경제적 종속, 기망 등은 실질적인 폭행·협박에 해당된다. 더욱이 동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은 폭행과 협박, 곤경에 빠뜨리는 위계 등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광의 성범죄와 협의의 성폭력 범죄의 구별은 대상이 성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구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의 양상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피해의 정도를 나누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동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를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즉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제243조 음화 등의 반포 등, 제244조 음화 등의 제조 등,

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는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소년대상 성범죄자 및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상공개 대상자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줄고, 성매매근절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앞의 논문 II로 표기), 경희법학 제45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10, 137-138면 참조.

44) 박은정, 앞의 논문, 27면 참조.

45)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제267회 국회(임시회의), 2007. 4. 24.

제245조 공연음란의 죄,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등, 제294조 미수범, 제297조 강간, 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 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 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 강도강간의 죄 그리고 동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범죄를 단죄하고 특히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된 양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범주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적 보호영역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 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보호영역을 좁힌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아동포르노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성보호법」의 아동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 범죄의 구별을 없애고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여자아동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가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굳이 「형법」상 강간의 객체(여자)에 한정하여 13세미만의 여자만을 객체로 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형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으나, 근본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달리 취급해야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법 제8조는 아동포르노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아동포르노 제작자에게 아동을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자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 포르노의 단순소지의 불처벌과 달리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포르노 제작·수출입·판매자 및 수요자 그리고 아동을 아동포르노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자는 모두 공범관계이다. 동법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범죄의 효과성에 따라 형벌을 구별하고 있으나, 실질적 공범 관계인 이들은 제작자이면서 수입·수출자, 알선자일 수 있으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수요자에 의해 지속된다. 따라서 수요자/소지자의 수요/소지행위는 아동포르노를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범으로서 처벌함에 있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동법 제14조는 아동대상 성범죄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이거나 후견인 경우, 검사는 「민법」 제924조에의 친권상실 청구 등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근친 등에 의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친권 상실 청구의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친권자 등의 성폭력 범죄자가 처벌된다하여도 또다시 아동과 동거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아동의 친권자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개연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검사의 실질적인 친권상실 청구와 그에 따른 아동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원어민 외국어 교육이 성행하면서 학교 및 학원 등의 외국인 교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행 성범죄경력자의 경우, 동법 제45조에 의거, 취업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

인 경우, 성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확인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에 취업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아동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 취업기관에서는 이들의 범죄경력 증명여부 확인을 필수조건으로 하되, 이는 정부부처에서 관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제정당시 입법취지가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동의 복지권이 보장되도록 수차례 개정되었다. 동법은 기본이념으로 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무차별원칙 및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가정환경제공, 아동 이익의 최우선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및 요보호 아동의 보호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 아동들의 복지 규정⁴⁶⁾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있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보호조치는 미비하다.

한편, 동법 제12조 제1항 친권상실 신고 등의 청구⁴⁷⁾ 및 제13조 제1항 아동후견인 선임청구와 관련,⁴⁸⁾ 통상 친권상실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는 「민법」⁴⁹⁾ 및 「아동성보호법」에서 당해사건의 수사하는 검사가 청구하도록 규정⁵⁰⁾하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46) 동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표기하고 있다. 기왕의 법에서 아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5조에서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은 아동의 날 및 아동주간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7) 제12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48) 제13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49) 제924조(친권상실의 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신고할 수 있다.

50)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상실과 관련된 모법인 「민법」이나 「아동성보호법」 등에 비추어 보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보다는 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역할이나 위상을 감안할 때 더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의 남용 및 비행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검사에게 조사결과에 따른 범죄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후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다할 것이다. 또한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특히 성폭력 등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에 있어서 「아동성보호법」상 유사 성범죄 처벌형량보다 상당히 낮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8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대자는 가정구성원(특히 친권자)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상당히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아동학대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피해아동이 가해 친권자로부터 일정기간 분리되어 아동의 생명권 및 생존, 발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입법적 부담이 된다면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보호처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정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32조는 아동 학대에 따른 치료비용을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⁵¹⁾하고 있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이 국가 및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책임져야한다는 것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이다. 현행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등의 비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6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동의 복지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동법은 내용상의 한계로 인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더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왕에 동법이 아동의 복지실현을 통하여 아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입법취지가 있으니, 아동권리협약이 선언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그간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입법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2) 청소년 기본법 및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관련법들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

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1) 제32조(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과 완전히 대상을 다른 것처럼 보이나 실제 청소년관련 법률의 보호 주체는 청소년(9-24세)으로 아동과 중복된다. 따라서 유사한 법률이 산재함으로써 법규정의 남용과 함께 오히려 아동복지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IV.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분석

동 협약 비준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제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정의

정부는 현행 법체계는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연령기준으로 아동을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 아동과 청소년 등도 기준의 명확성이 없으며, 용어자체도 아동, 청소년, 연소자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법적 안정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개념 및 기준연령을 정하여 혼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국가원리를 바탕으로 제정된 아동관련법의 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도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일반원칙

정부는 아동에 대한 무차별원칙,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선 무차별원칙과 관련, 특히 장애아동, 제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새터민 아동지원 그리고 인종차별금지 등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법들은 소극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과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하여는,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의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하고 진술을 녹화하게 하며 이를 재판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의 신빙성이 수사 및 법정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아동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 피해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조차 아동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⁵²⁾

한편,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중심의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사 증거자료 확보 등과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해바라기아동센

52) 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동 성폭력 제법 방지 및 아동 보호대책, 법무부, 2008, 91-94면 참조.

터가 운영 중이나 그 수가 전국에 9개소에 불과하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정부는 특히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와 관련,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차별금지 등에 대하여, 교내 홈페이지, 교내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아동의 글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으나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신앙을 교육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동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방법으로 종교교육이 행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차별전면 금지를 위한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⁵³⁾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간접차별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전면금지를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조례와 충돌하고 있다. 즉 법률(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견해가 통설이기 때문에 해당조례를 근거로 학교에서 간접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⁵⁴⁾ 그러나 교육적 차원이라 해도 간접차별은 명백한 아동의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정부는 아동의 양육환경과 관련, 특히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아동의 가정보호 기능을 강화하였고, 입양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여 입양허가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입양의 사후관리는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입양의 경우 비공개로 되어 있어 입양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입양의 경우도 입양아와 친부모, 위탁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정보제공 및 상봉에 대한 법적 근거, 모국방문사업과 관련한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안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로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⁵⁵⁾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불이행할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신고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

53) 대한민국 정부, 앞의 보고서, 57-58면 참조.

54) 이덕난, 학생간접차별허용 여부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1.3.28자 참조.

55) 대한민국정부, 앞의 보고서, 79면 참조.

5. 기초보건 및 복지

정부는 특히 장애아동의 자립을 위한 조기치료 및 재활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아동의 장애발생 단계부터 초기응급진료, 조기재활, 퇴원 후 지역사회의 재활로 연결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아동의 재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 보육 및 교육에서 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무상교육대상으로 저소득층 장애아에서 전체 장애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책 검토 중이다. 그러나 소외된 장애아동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장애아동의 권익 및 사회통합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등으로 학교와 사회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아동양육사의 방문지도, 한국어교육,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⁵⁶⁾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의 부적응으로 인한 저학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을 다양화하여 저학력 아동의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정부는 취학 직전 1년의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3년의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확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교육시설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운영 중인 시설도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이에 정부는 대안교육 시설을 통해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7. 특별보호조치

정부는 아동 성착취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대책,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아동성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경찰관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아동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여성·학교폭력 ONE-STEP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하여 상담·보호·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히 아동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등의 지원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 아동성매매 피해자들은 흡연, 약물, 성병, 가정폭력, 성폭력, 정신병적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나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지원시설이 갖추어진 아동 성매매피해자 전문치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⁵⁷⁾ 또한 아동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법률지원의 지원체계가 전무하여 아동들이 탈 성매매를 하고자하더라도 구조를 받기 어렵고 탈 성매매한 이후에도 법률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

56) 대한민국정부, 앞의 보고서, 105면 참조.

57) 이정미, 성매매방지법 6주년, 그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 27면 참조.

법적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 아동 성매매피해자들이 겪는 이중 피해는 심각하다.⁵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ONE-STOP지원센터」의 기능 중 아동 대상을 특화하고 아동 상담전화 1388, 지역별 아동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의 간단화와 신속화 그리고 홍보가 요구된다.⁵⁹⁾

한편, 미혼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상당히 미미하다. 2009년 전체 요보호아동 중 미혼모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이들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삶을 산다. 일차적으로 이들은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으로 인해 교육연한이 낮아지면 학력제한이 많은 사회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고 이는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미혼모아동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교육권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동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임신이 아동인 학생에게서 교육권과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⁶¹⁾ 임신한 아동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교육권을 박탈한다면 결과적으로 아동임신이 줄어들기보다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낙태로 이어지기 쉽다. 아동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별 이견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인데,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서구의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미혼모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인 아동(학생)에게 출산휴가제등을 도입하는 등을 참고하여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⁶²⁾

V.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대안

인간은 누구나 아동기를 거친다. 아동은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존재로 성인처럼 존엄성을 가졌으나,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⁶³⁾ 이러한 관점은 실정법 및 국제협약을 해석함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4가지 일반 원칙-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명권, 생존과 발달권(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의사표명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에 비준한 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에 있어서 일반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국가적 책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적 책무는 법과 제도, 즉 정책에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적·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에 아동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최고규범으로 「헌법」에 아동의 지위와 권리,

5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매매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모색, 2008, 125면.

59) 졸고, 앞의 논문II, 59-60면 참조.

60) 보건복지부, 2010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258면 참조.

61) 김은미, 청소년미혼모 학습권보장 공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2010, 7면 참조.

62) 김은미, 앞의 글, 8면 참조.

63) 이재연 외, 아동과 권리, 창지사, 2007, 11면 참조.

즉 아동권을 규정함으로써 차세대 국민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국가의 우선적 책무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아동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으나, 소극적 정책으로 이들이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미혼모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통한 이들의 삶의 질이 격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미혼모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이들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의 의무화 및 직간접체벌의 전면금지 등의 실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상 유보조항의 내용인 허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민법」상 입양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아동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아동 전문기관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수사실무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아동포르노 및 아동 성매매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아동을 희생자로 삼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관련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포르노의 경우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Youth Keeper’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시스템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성보호법」상의 성범죄, 성폭력 범죄의 구별을 없애고 포괄적으로 성범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동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당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현재 「아동복지법」은 그 비용을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은 차세대 국민이며 인류의 미래이다. 아동이 인권 및 기본권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이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선택,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수용, 헌법의 아동수용추진을 위한 공청회, 헌법의 아동수용추진 위원회, 2010.
- 김선택,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1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10.
- 김선택, 기본권일반규정의 개정방안연구,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 김용화,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제3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김선택, 성매매근절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경희법학 제45권제3호, 경희법학 연구소, 2010.
- 김은미, 청소년미혼모 학습권보장 공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2010.
-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박선영,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2007.
- 박은정, 아동성범죄 수사 및 재판실무, 한국젠더법학회, 2010.
- 박홍규,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21세기북스, 2010.
- 변용찬 외,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변진석, 미국헌법상 아동의 권리, 안암법학, 2008.
- 이덕난 외,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0.
- 김선택, 학생간접체벌허용 여부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 점, 2011. 3.28.
- 이병희, 가족법, 법원사, 2006.
- 이정미, 성매매방지법 6주년, 그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
- 이재연 외, 아동과 권리, 창지사, 2007.
- 전남련·김재환 공저,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6.
- 정혜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008.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여성가족부, 2007.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제267회 국회(임시회의), 2007.
- 대한민국정부,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2008.
- 보건복지부, 2010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 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대책, 200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매매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모색, 2008.
- 통계청, [http : //kosis.kr](http://kosis.kr).
- [http : //www.eaves4women.co.uk/Resources/Reports_And_Consultations.php](http://www.eaves4women.co.uk/Resources/Reports_And_Consultations.php)

◆ 주제발표 2 ◆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은 주
(동국대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맞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다민족, 다인종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도 상반기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208,544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20만명을 넘었다(박미경, 2010).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결혼이민자 자녀는 24,7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1.8% 증가했으나, 이주노동자 아동은 1,27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9.4% 감소했고, 초등학교 재학생이 834명(65.7%), 중학교 재학생이 307명(24.2%), 고등학교 재학생이 129명(10.2%)의 순으로 나타났다(이혜원, 2010).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이 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약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0).

이와같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지원하여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사회적 지원대상으로 인식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반 아동과 다른 아동이라는 차별적 시각이 내재된 지원정책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선아동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말체험학습이나 학용품, 행사참여 등 물적 지원과 멘토링 등 일반 아동들과 구별하고 차별화 시켜 우리사회의 소수자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재된 편견과 차별적 시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한국아동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부족한 능력을 가진 열등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와같이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여 스스로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양계민, 조혜정, 이수정, 2009).

물론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환경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문화적 교류부족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습득 가능성을 그들만의 장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사회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사회인으로 활약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권 교육에서 탈락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잠재적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면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국가간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들의 문제상황과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차별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분리해서 독립된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류집단과 다르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그들의 잠재적 역량 발휘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부 정책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결과로 현행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대부분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교육에 치중되어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한승준, 2008; 정영근, 2009).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실제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의 언어, 생활방식, 사회규범을 배워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부분이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이들의 언어교육 및 학교적응에만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을 제공하여 중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이나 진로지도, 자립지원 또는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에 관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통계도 제시되지 않고 부처별, 기관별로 다른 정책을 제공하여 중복되거나 정책이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아동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이중적 잣대로 적용되어 실제 이주노동자 아동들이 기본적인 교육권도 침해받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인 외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 또는 가족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와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책방안과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취학을 시점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 상황들이 점점 고착화 되어 이들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란 사회구조와 제도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하여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임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인 일단의 정책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도 원리이어야 한다. 즉, 다문화사회란 “불평 등의 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다양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사회는 문화 간 격차와 이질성에 의해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 인종, 관습,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에 의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박미경, 2010).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문화와 인종에 따른 차이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 보려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상황을 문헌적으로 고찰해보고 그들이 법률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과 관련된 국내법 및 국제법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가정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현황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는 학술적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대해서 학자마다, 정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대부분 외국인노동자까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의 결합, 여성결혼이주민과 한국인의 결합 등을 다문화가정의 범주 속에 넣는 것은 공통적이다. 새터민의 경우 학자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부 정책 역시 새터민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상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정책 입안에 있어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과 새터민 정책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김미선,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은 두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제결혼가정 아동과 이주노동자가정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전에는 이들에 대해 혼혈아동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차별적 요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용어가 제안되어졌고 현재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아동이라는 말보다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의 아동들은 자신들의 모국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문화를 경험하고 또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황지민, 2009)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으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국제결혼가정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 이주노동자 가정 :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출생한 아동,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동

1) 국제결혼가정 아동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경우 2010년 현재 30,040명으로 2009년 대비 21.4%로 증가하였으며,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89.9%(27,00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초등학생 78.6%, 중학생 16.0%, 고등학생 5.4%로 초등학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비율은 경기도가 22.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2.9%, 전남 9.6%, 경남 7.2%, 충남 7.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국적별 비율은 일본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17.3%, 필리핀 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국제결혼가정 아동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2) 외국인 노동자 아동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경우 2010년 현재 1,748명으로 2009년 대비 37.6%로 증가하였다. 학급별 비율은 초등학교 62.9%, 중학교 25.5%, 고등학교 11.6%로 초등학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이 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별 비율은 서울 39.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28.0%), 인천(7.6%), 부산(5.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국적 비율은 몽골(20.8%)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19.0%), 일본(1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외국인 노동자 아동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1,115		215		61		1,391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2009	834	△15.0	307	△2.2	129	20.6	1,270	△9.4
2010	1,099	31.8	446	45.3	203	57.4	1,748	37.6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3) 다문화 가정의 다양성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구분 범주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의 아동, 이주 노동자 가정 아동, 새터민 가정의 아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형성 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다양한 가족문화를 형성하여 범주화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먼저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인 경우,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엄마가 한국인과 재혼을 하면서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와서 가정을 이룬 경우, 반대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빠가 외국인 엄마와 결혼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에 따라 문화적 차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들어, 필리핀은 같은 동양권이어도 영어권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특정 종교를 가진 경우가 많아 다른 국가와 차별적 특

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거주지가 농촌인지 도시지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입국한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아이를 데리고 입국한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입국한 경우, 미혼 이주노동자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신국이 다른 이주노동자까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릴 수 없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다른 집단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정책적으로 소외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진 다양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차별상황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적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아동들의 학습권과 연관되어 살펴볼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이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는 교육에 큰 문제가 없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 아동들의 학습권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소득이나 거주지의 차이에 의해 아동들의 학습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할 위험이 있다. 첫째 아동의 언어능력 부족인해 학습부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아동들의 언어지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아동들은 독해력, 어휘력, 쓰기 및 작문능력이 현저히 낮게 되는데 학교에서 아동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아동들의 학습능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학교에서 아동들이 외모와 인종적 차이로 인한 왕따 등의 부정적 경험으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현적 차이로 인한 차별경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 상황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될 수 있다(김미선, 2010).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정의 아동들이 입학거부를 당한 경우도 있어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학교에서조차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10)의 이주노동자 아동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로 공교육 특히 고등학교에서 발음을 놀리거나, 무시당함, 수군거림, 피부색 놀림, 돌아가라고 협박, 발로 걷어차임, 소지품 빼앗김 등의 차별적 경험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어능력부족으로 인해 입학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아동이 약 61%, 비자문제 약 34%, 학교의 입학거부 약 15%로 이주노동자가정 아동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상당히 차별받고 있음이 보여진다. 특히 한국어 이름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68.8%나 된다는 것은 이름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주노동자가정의 아동들은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나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다닌 경우가 약 20%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처음 배운 장소가 지원단체로 나타난 경우가 약 29%나 되어 여전히 제도권 교육체계에서 한국어 교육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인종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당하고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이러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경험하는 차별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4. 다문화가정 아동 관련 국내법과 정책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정책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주류사회 아동들과 다르게 처우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법과 정책이 아동들의 기본적 발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1) 헌법

헌법헌법상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인 이주민 역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재판소 판례(2001. 11. 29)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김미선, 2010).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간은 존엄하며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 6조 제 1항에 따라 우리나라 비준,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박미경, 2010). 이에 따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아동이 부모의 체류 적법성 여부와 국적에 관계없이 아동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는 헌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과 같다.

제2조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 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 2조 2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해보면, 첫째 한국인과의 결혼이민자이거나, 둘째 출생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셋째,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치와 보호, 아동에 대한 보육 등 광범위한 보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개념 및 정책 대상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 국적법

헌법상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즉 개인은 국적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에 속하게 되고, 그 국가의 국민이 된다. 국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국민은 특정 국가의 구성원, 즉 국적을 가진 개개인의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국가에 있어서 ‘국적’과 ‘국민’, ‘국가’는 가장 사회의 기본 구성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국민’의 존재와 함께 ‘법’도 마련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서의 국적법은 가장 핵심이 되는 법력일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점차 진입하면서 역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국적의 부여, 국민이 되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적을 부여받는 순간부터는 내국인의 권리와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는 국적을 부여받지 않거나 국적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상태의 가정이 많다.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출생, 인지, 귀화가 있다.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 조건은 한 쪽 부모가 반드시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이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자녀는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이나 미등록자의 자녀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의 경우 ‘국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국가에서 보장하는 기본법과 정책의 경계밖에 존재하게 된다.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의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데, 조건 중 하나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5조 제 1호의 ‘5년 이상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갖추지 않아도 제 6조의 간이귀화 요건 제 2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국적법 규정이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의 요건과 자격 범위에 있다. 국민이라는 개념이 가진 배타적 성격은 어느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다문화 사회에서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는 살펴봐야 할 일이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쪽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고 있지만, 둘다 외국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제외된다. 또한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단일 혈통을 중시했던 기존 법규정인 속민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정의 아동인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출생과 동시에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교육권 및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아동의 기본적 발달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다른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4) 초·중등 교육법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받을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 교육법 제 60조 2항을 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교육과정과 학년제 등에 있어서 기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인 학교에는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했던 한국인 학생이 수학할 기회를 가진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를 보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거나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거나 이주노동자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이거나 한국어에 서툰 상황일 경우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지도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받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학습을 위한 지원여부는 보장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를 개정해 다문화가정 가정 아동 중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대신해 ‘거주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므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여전히 학교입학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2008년 확정된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사회로 발전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계획이다. 특히 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 정책의 국가전략적 활용을 위해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습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학부모들과의 연계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적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이 독립된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별로 제공되어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4. 다문화가정 아동 관련 국제법

국제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인종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UN헌장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협약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들은 모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원칙은 모든 아동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1) UN 협약

국제인권법 규범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17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며 보편적 인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 2조 제 2항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조 제 1항에서도 어떠한 차별없이 동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규약에 의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다문화가정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은 대표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 수 있다. CRC는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provision)받아 사용하

고, 위대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Protection) 받으며, 아동 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Participation)할 기회를 가질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제공은 아동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는 것, 보호는 아동을 위대한 환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 참여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원, 2010).

CRC의 총 54개 조항 가운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조항은 제2조 ‘모든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이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활 전반에서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제 9조 ‘모든 아동은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해치거나 보살피 주지 않을 때는 제외한다.’, 제 10조 아동이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아동은 부모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 26조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제 28조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아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은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 29조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아동은 교육을 통해 인권, 자유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제 20조 소수집단의 아동은 고유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위와 같이 아동권리협약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를 비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이 차별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상황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생활하는 모든 주변 환경에서 언어 능력의 부족, 다른 피부색, 이름, 종교,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본적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는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라도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권 보장이나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육받을 기회도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협약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은 아직 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재회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 아동의 경우 한국에 와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양육을 위하여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권 등이 특히 문제가 되어 교육부가 이를 완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재한외국인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동 제 2항에서는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 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

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제 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재한외국인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법에서의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은 결혼이민자 내지 한국국민과의 사실혼 관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순수외국인끼리의 결혼으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특히 장기체류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 기본사항을 결정하고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기존 국내법의 범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법적 권리 확보를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요내용을 보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한외국인에 대한 개념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라 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이 이주 노동자이고 그들의 절반이 미등록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재한외국인처우법의 적용 범주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제 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 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 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등의 조항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만 한정하여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및 문화 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과 교육지원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한국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해야 할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지원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제 18조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조항과 모순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조항을 두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 및 제도 등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과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현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다문화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이유로 동화주의적 정책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 19조 세계인의 날을 제정하여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을 분리할 수 있다. 아직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인주간 등과 같은 전시성 행사를 통해 그들에 대한 편

견과 차별적 인식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세계인의 날이라는 일회성 행사가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통해 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 의해서 차별받고 배제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외국의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정책¹⁾

1) 독일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일민족주의를 고수하는 국가였지만 1990년 통일 이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9%가 외국인일 정도로 다민족 다인종국가로 변화하면서 다민족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법과 정책을 모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2000년 시행된 ‘시민권 및 국적법’인데, 이는 기존의 속인주의 정책의 변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외국인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속지주의정책을 적용하여 시민권을 부여하여 외국인 아동들이 국적을 받아 독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2005년 이민법 개정으로 독일이 이민국가임을 명시하여 장지적인 이민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연방정부가 이주청소년담당부처를 운영하여 12-27세 청소년 아동이 이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상담 및 후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언어교육,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직업 교육, 차별철폐 등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10세 미만의 아동들은 바로 학교에 등록해서 다닐 수 있고, 독일어가 모국어 가 아닌 경우 특별학급이 각 시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외국인 실업률이 독일인의 2배가 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600시간 언어교육 코스를 운영하며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고등교육 수수료 비율이 낮은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그리고 외국인 가정의 모국어와 언어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 출신 교사를 통해 모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이 독일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언어적 문제와 그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2) 프랑스

현재 프랑스는 ‘이민통합법안’에 의해 이민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에 관해서는 2006년 설립된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를 통해 그들의 교육과 고용기회 균등보장을 위해 교육정책을 교육과정 상에서 다문화주의 채택 수준과 소수인종 언어교육의 수준을 증진시키고 있다.

1) 김미선(2010)의 연구에서 요약 발췌 하였음(미국 제외).

프랑스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교육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프랑스 국민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들이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도록 한다. 이처럼 프랑스는 공교육제도에서 모든 분야의 ‘평등’을 강조하여 프랑스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보통, 의무, 무상교육을 프랑스 국민과 동등하게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 프랑스어교육센터를 세워 프랑스어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모국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아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교육관련 자료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부모의 동행, 후원, 듣기 네트워크 위원회’를 두어 다문화가정이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 학교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해 이민, 탈식민지화, 인권법규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프랑스 학생들이 이민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해하여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문화가정 취학아동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수인종 언어교육의 수준’을 마련하여, 특별교사가 프랑스어 교육뿐 아니라 학교적응을 위한 문화 및 역사교육 등 프랑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모국어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 유지와 보존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서 이주민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필요예산을 보조해주고 이주민과 같은 국가 출신의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다문화가정의 모국어교육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공교육 제도권안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신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어 능력 배양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동화주의적 정책이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권 교육안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호주

호주는 전체 국민 중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민국가중의 하나이다. 호주는 다문화와 이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 다문화부’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입안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다문화 연구소와 이민 다문화 인구 연구국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일관성 없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호주는 이와달리 이민 다문화부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는 아동들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아동기 교육부터 인종주의, 편견해소, 소수문화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학교교육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교육 중심에서 ‘문화적 다양성 존중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모국어 유지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부모들의 학교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다문화가정의 모국어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고 있다.

4) 미국

미국은 대표적인 이민국가로서 미국내 이민자 수는 전체 미국국민 9명 중 한명이고 학령기 아동 5명 중 한명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를 가지고 있다. 미등록 이민자 수는 약 1천 2백만 명이고 이 가운데 16%인 약 2백만 명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공교육 제도는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총 13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2001년 개정된 연방법인 낙제 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이민가정 아동을 포함한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추가 학습기회 제공, 영어미숙학생의 영어능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학업성취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정 아동의 공교육 진입은 실제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과 그 이후 진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언어적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교육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어교육 및 개별 학습지원 대책을 제공하여 이들이 제도권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외국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공존을 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모국어나 모국문화를 체험하거나 습득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는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공교육 안에서 그들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습득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2006년 이후부터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인식 전환을 통해서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인력고용’ 차원에서 벗어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까지 포괄하는 방법으로 선회하게 되었다(이성언, 최유, 2006). 이에 따라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기관별로 외국인의 유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지원센터, 캠페인 활동,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들은 단순히 외국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적응과 통합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주 외국인의 행태와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적으로 산업 인력 확보에 주력한 정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주 여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정책이나 방안 제시는 미비한 실정이다(김미선, 2010).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주류문화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

려운 아동이라는 위치로 인해 이중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을 강조하여 문화적 상이성에 대해 여전히 폐쇄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여전히 많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성인중심의 사회에서 성인대상의 정책중심이 제공되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차별적 상황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정책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기본권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우리사회에서 미래 인적자본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으며, 그들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기본적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정책적 지원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그들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신체적 차이 등이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정 아동의 경우 교육기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교육과정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들의 개별적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시급할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들의 경우 대안학교나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많은 수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중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언어 및 학습능력의 저하와 학교에서 받는 차별 상황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처럼 그들의 모국어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기회가 공교육 제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응시키려는 동화주의적 정책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들의 문화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철폐하고 그들이 가진 기본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이루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

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정의 아동인 경우 그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들의 기본적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 김미선(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리’-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10).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 미등록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p. 101-130.
- 양계민, 조혜정, 이수정 (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 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서울 : 법무부 출입국, 외국 인정책본부
- 이혜원(2010). 이주아동교육권의 국제적 기준과 해외사례-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정영근(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교육철학* 44, p. 1 13-117.
- 최경옥(2010).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국가인권위원회.
- 한승준(2008). 동화주의 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 프랑스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99-126.
- 황지민(2009). 일반아동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제발표 3 ◆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김 윤 태
(우석대학교)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차별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¹⁾을 중심으로 -

김 윤 태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로 31회째 장애인의 날을 맞고 있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장애인의 날 슬로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로 정하였다. 언뜻 차별과 평등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듯하지만, 아직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려’는 ‘도와주고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31회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로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위와 같이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한 차원 높은 권리주체에서의 논의에서 보듯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제화 등을 통해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발전에는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확보에 대한 사회단체의 헌신적 참여와 당사자의 적극적 대처를 통한 인권운동은 우리사회의 아동권리 확보 노력과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시설 기관에서의 차별 금지에 대한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별에 대한 논란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예에서 보듯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은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동권리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지와 관심 부족의 당면문제는 장애와 관련된 인권운동과 권리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역량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12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12개 정책요구안을 내세우며 420 장애인차별철폐 노숙농성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포함한 12개 정책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12개 요구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보편적 복지 제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및 자립생활

1) 아동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중으로 차별받기 쉬운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6장 5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6장은 총칙(제1장), 차별금지(제2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제3장),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등(제4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제5장) 그리고 별칙(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의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절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 보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즉각 제정,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최대한의 자립생활 보장하는 복지여건 조성,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이다²⁾. 이와 같은 요구는 장애와 빈곤을 개인,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직접적인 차별을 넘어서 간접차별금지와 평등한 사회와 헌법에서 보장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여건 조성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장애인권운동의 큰 성과인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서 나타난 장애아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법은 지원법성격을 갖는 기존 법률에서 나타난 지원이나 규제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통해 차별금지 권리를 확보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차법 제4조 차별행위에 장애인 차별유형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관련자를 차별하는 행위 보조금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1. 직접차별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4조 제1항 제 1호는 “직접차별에 대하여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직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입학 거부나 특수학교로의 전학, 야외활동과 체육활동에서의 배제, 특수학급이나 특수활동으로의 분리 등이 해당되고 식당과 수영장 목욕탕 등 각종시설에서의 거부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적으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학시에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이 33.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2조 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차별로 보고 있다. 이 규정은 아동의 발달과 이

2) 620장애인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정부에 대한 12개의 요구안을 제 31회 장애인에 날에 맞추어 발표하였다.

3) 이승기,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재인용.

해를 토대로 한 교육 목표권에 근접하는 구체적 규정이다.

3.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장차법 제4조제2항은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여야한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에게 부과 하였다. 필요한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와 보청기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수화통역, 문자통역, 자막 등 의사소통수단,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 접근에 필요한 시설 설비 마련, 정보접근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웹사이트 접근성 지침 등이 포함 된다. 장차법의 취지에 맞춰 2010년 2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에서의 IPTV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청각, 시각장애인 시청 지원을 의결한 것이 장애아동의 문화향유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4월 11일 부터는 국공립학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영 제9조에 규정에 의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대한 보장 뿐 아니라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도 제공해야 하며,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평가방법의 제공도 명시하고 있다. 교육상 장애인 차별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교육책임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는 아동의 견해존중의 기본원칙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로서 정보접근권과 의사소통권에 대한 명시를 통해 장애아동의 차별을 받지 않고 불리함이 없도록 한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존중과 생명 발달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광고에 의한 차별

동법 제4조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에 대한 차별

제5항에서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라고 규

정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도 직간접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와 불리함을 없도록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보조원등으로 돕는 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차별을 금지 함 으로서 실질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양육기간동안의 필요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다.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 차별 법령 정비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장차법의 취지에 맞도록 각 개별 법령에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규정에 대한 발굴과 정비를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실제적인 차별철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장차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별요소가 있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주의적으로 된 법규정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작업이다. 한상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그 해소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처벌,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들을 어떻게 그의 생활관계속으로 유의미하게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중략... 장애인법제가 장애인에 대한 제반의 차별을 해소하고 그 폐해를 시정하는 일련의 교정적, 복구적 법률과 장애를 향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급부를 향하는 적극적, 형성정 법률이라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고려됨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⁴⁾며, 이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선 인권규범성격인 장차법과 더불어 사회보장적급부 규범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발달환경에서 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것은 장차법의 수정안에서 장애아동에 관한 절을 추가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인식변화이다.⁵⁾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이루고 적극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별도의 입법취지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법의 전면 시행과 함께 장애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지역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동력이 될 것이다. 사회통합의 동력은 사회각 부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무, 부성권, 및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영역에서 잠재적으로 문제성 있는 법령 및 조항별고 구체적 차별적 요소를 찾아 대체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실제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7. 장애아동복지법 제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의 필요성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장차법’에서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한 장애, 나이,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같은

4) 한상희, 몸과법-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5) 박종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에서 장차법 수정안에 장애아동적과 장애여성절이 추가된 배경.

발달환경을 갖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아동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발달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동법 제8조에서 명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에 대한 취지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직접차별금지를 넘어서 장애아동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간접차별금지와 지원을 통해 형식적인 평등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인식변화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하고 사회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격은 그 국가의 경제규모나 외교 등 경제외교 수준만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과 정책의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의 위치와 장애로 인해 이중으로 침해 받기 쉽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이와 같이 성숙한 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참고문헌

서재경,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장애인 차별법령발굴 및 정비방안, 2007.

강민희,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정책과제.

박중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국제인권법 제7호, 2004.

이승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함의,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한상희, 몸과 법(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6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보도자료.

◆ 주제발표 4 ◆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역사적으로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감내해 왔다.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성인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어 왔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였다. 조네이도(2011)는 성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아동식민화’¹⁾하였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역사적으로 아동과 성인이 차별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지배는 완벽하고 틈이 없는 탓에 아동의 종속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조차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하였다.

아동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차별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법은 항상 아동과 성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법은 아동과 성인의 처우를 구별해 왔다. 이러한 법률상 처우의 구분은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을 내포한다((Breen, 2002). 아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부모의 의사결정에 통용되었고 이는 오히려 차별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만, 이때 권리 제한은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권리의 보유자간 특히 부모와 아동권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규제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이에 따라 구별해서 대우해야 한다. 사람들을 성별이나 소속 민족에 따라 구별해서 대우해야 하는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Breen, 2006).

우리나라에서 최근 아동에 대한 법적 차별이 문제가 되었다.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볼 경우 2010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아동 인구는 9,976,186명 20.41%²⁾에 이르는 전 국민 인구의 5분의 1에 이르는 “아동”을 헌법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이는 명백한 “아동”에 대한 법적 차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 1월 「헌법 ‘아동’수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헌법 ‘아동’수용 추진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에서 아동이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아동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선택(2010)은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단순히 헌법전내에 ‘아동’이라는 용어를 편입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의 지위 내지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아동차별은 여성이나 장애인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은 위험을 이해

1) ‘만들어진 아동’의 저자 조셉조네이도는 문학과 소비주의에 나타난 아동과 성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성인 지배구조에 아동을 적용시키는 것이 ‘양육’이었다고 비판한다.

2)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연령별 전국(추계)인구」 참조. 검색일 : 2010.4.7.

하거나 자신의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어려움을 피하는데 취약하여 자신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이 발달해 가는 아동기의 발달적 속성(Breen, 2006) 때문이다. 아동이 연령 차별을 받는다고 해도 성장해가면서 아동이란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언제나 아동이라는 분류가 남아있게 되고 이러한 분류는 항상 차별 대우를 낳게 되며, 아동의 권리는 언제나 제한 당할 것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이재연, 2010).

‘비차별’은 국제인권선언의 기본원칙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조 1항과, 2항)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차별없이 동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비차별을 아동권리의 기본 요건으로 전제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연령차별에 대해 주목하였다. 2005년 ‘유아의 권리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7호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비차별의 권리 제 2조에 근거하여 유아는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차별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보고, 차별은 아동의 사회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성인에 대한 아동의 분노와 충동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회와 자기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차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동차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권리를 바탕으로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정리하고, 아동차별에 대한 그동안의 시각을 정리하고 아동자신이 차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 아동권리 연구가 아동권리 수준을 탐색하고 권리이행 방법론에 집중되어 아동권리의 본질적 개념을 탐색하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동권리를 논하면서 정작 아동 자신의 생각과 권리상황에 대한 평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이옥, 2010)가 있어 차별에 대한 아동자신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자신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차별수준과 차별 행위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서를 파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차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아동권리 이행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며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개발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권리 현장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전문가들에게 아동권리의 철학적이고도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차별 및 차이에 대한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차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차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설문문의 내용으로 인해 아동들이 차별에 대한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는 학교의 우려에 따라서 조사대상자 표집의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 아동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아동차별’을 금하고자 하는 학교의 정책에 따라 조사 대상 아동의 가족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차별의 개념

인권 법률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직적 기능을 갖고 있다. 법은 그 대상을 해방하거나 보호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법 또한 그렇다. 법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개인을 자유롭게 하며, 동시에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인권 법률에서 특히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기 때문에 법률이 작용하는 방식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거나, 실현하려는 목적과 사용된 수단, 그리고 인간관계 사이에 정당한 균형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이다(Breen, 2006).

아동차별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 2조에서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아동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언급³⁾하고 있으며 Breen(2006)의 지적대로 2조 2항에서는 부모 및 아동양육자와 아동이 정당한 관계⁴⁾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평적 기능까지도 확장된다. 법의 수평적 기능은 한 개인에게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수직적 기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간 관계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다. UN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동의 자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와 아동의 자율성이 빚어내는 갈등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의해 다소 해소될 수 있다(황옥경, 2011).

그러나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비판이 있다.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은 어느 아동이든지 혹은 대부분의 아동에게조차 최상인 것은 흔히 명확하지 않고 이론적이며, 대안들 가운데 매우 개별화 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단점이다. 개별화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laster(1987)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리란 “불명확하고, 불공평하며, 스스로 좌절시키고, 더욱 일반적인 정책 고려에 의해 무효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2. 평등 그리고 ‘차이’와 ‘차별’에 대한 시각

역사적으로 아동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존재해 왔다. 보호주의와 아동권리 주의이다. 아동보호주의는 아동의 자율성보다는 복지의 대상자로 이해한다. 이들은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합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조 1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4) 2조 2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아동과 성인의 관계를 설명함.

리적인' 성인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최선의(best)',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본다. 아동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독립할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호주의 입장에서 Goldstein, Freud 및 Solnit(1980)은 가족은 아동의 신체적, 지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본단위로 보았다. 결국 아동 보호주의는 가부장적 태도와 이미 정해진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고수한다.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성인이 비합리적이고 의존적인 아동들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 Foster와 Freed(1972)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탄생되기 이전 아동이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법이 실패했으며, "미성년자의 지위는 봉건제도의 마지막 유물..."이라고 비판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평등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평등에 관한 많은 종류의 방법을 통해 이를 성취하고자 한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것과 평등에 관한 국내외의 법률을 대충 살펴보기만 해도 이 법률들이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차별에 관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차별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 사이에 일관성 없는 대우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연령에 따라 다른 대접을 해 왔고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연령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다른 대접을 받게 하는 기준이지만 차별적인 대우의 근원이 될 수 있다(Breen, 2004).

연령차별은 성이나 인종차별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인종차별은 정치적, 경제적인 힘이 없는 소수자를 향한 편견을 시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성차별은 수세기동안 여성에게 만연한 사회적인 장벽들을 뛰어넘고 법률과 정책들이 성적 균등을 이룰 수 있도록 자극해왔다(이재연, 2010). 인종이나 성별과는 달리, 나이는 계속 변하여 어느 특정 시기에 개인적인 특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나이의 속성이 있다. 나이는 바꿀 수 없고 또한 바꾸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평등의 조항에서 누락된다(Breen, 2006). 연령이 주어진 연령대의 보편적인 특성과 능력을 예상하게 해준다고 해도 이 보편적 결과를 해당 연령층 모든 아동의 발달결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아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관습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조장하게 되며 평등과 비차별 개념으로 보면 부당하다. 아동이 차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극히 드물다.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은 성(26.1%), 연령(24.7%), 학교성적(19.7%), 신체/외모적 조건(18.2%)에 따른 차별경험이 20% 내외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에 따른 차별(26.7%)은 제외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 아동보다 높은 40%의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3. 우리나라 법과 정책에 드러난 아동차별

우리나라 법에서 드러난 명백한 아동차별은 헌법에서 발견된다. 헌법에 아동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제한적 적용이라는 특성을 감안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정당한 해명이 없는 처벌의 차이는 차별이다. 헌법이 보여주는 아동에 대한 지위는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헌법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국가가 아동을 사회구성원으로, 인권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박선영 외, 2007). 이재연(2010)은 헌법에 아동이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과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아동을 위한 적절한 법적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훌륭한 정책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사회가 법적인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동에게 자

기의 공동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가 무시당하는 아동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아동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되는 것은 다른 중요한 원칙과 균형을 이루는 문제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인권 관련법의 이행과도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아동 미명시와는 별도로 아동관련법은 일반아동과 보호필요아동의 법 내용 균형을 볼 때 차별적으로 접근되어 왔다.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보호필요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다(이봉주, 황옥경, 이호균, 윤선화, 김경륜, 김혜란, 2006)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198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정부는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면서 아동복지의 대상을 일반아동으로 확대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혔다(이재연, 박은미, 황옥경, 김형모, 이은주, 강현아, 2008). 이후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선별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제기(황옥경, 2010)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자료를 분석해도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보호필요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의 3대 종합정책, 23개의 세부정책, 총 120 개의 추진과제 중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정책의 집중이 있다. 그나마 아동청소년 담당부처의 통합논란이 있었던 2008년 이후 아동정책은 더 이상 정부차원에서 발표되고 있지 않다. 2009년 일년 동안 아동청소년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가 2010년 다시 아동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면서 아동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책소외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전체예산 분배에서 아동차별은 더욱 심하다. 정부전체 예산에서 아동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예산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이며 선진국의 1/7~1/100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8년도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약 8,800 원(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예산에 국한 됨. 지방이양사업과 타부처 아동관련예산 포함하지 않음)이며 아동을 및 가족대상 지출은 공공사회지출 대비 1.7%로 나타나 북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1/10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간 아동에 대한 예산도 차이가 있어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차별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동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의 중류지역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임의표집하였다. 담임교사가 조사 대상 아동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을 요청한 후 회수하여 부실하게 응답한 부를 제외한 24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대학생은 남자 122명(50.8%), 여자(49.2%)이었다.

질문지 조사는 2011년 4월 10일부터 18일 동안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질문에 응답하는데 약 25분에서 15분이 소요되었다. 조사대상 연령에 따라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2. 질문지 구성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09)의 아동의 차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토대로 하였다. 청소년 정책연구원 질문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2조 차별조항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다. 질문지는 성, 민족, 거주 및 출신지역, 연령, 장애, 학교성적, 경제적 형편, 신체/외모, 종교, 가정유형의 10개의 차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민족관련 문항은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차별 수준에 대한 평가, 현재 얼마나 행복한 지의 정도, 그리고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질문지에 추가하였다.

질문의 형태는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질문지와는 달리 각 차별 문항에 ‘누구’로부터 차별 받았으며, 차별받았을 경우 ‘기분’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함께 질문하였다.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 교수 1명, 아동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 석사과정의 학생 각 3명에게 척도의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 받았다. 그 결과 척도 문항의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 아동의 차별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논의되었다. 일부 문항은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질문지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5명에게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 결과 최종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질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조사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1) 아동의 성에 따른 차별 인식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기준으로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 아동들은 외모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33.3%)과 성적으로 인한 차별(33.3%)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즉 연령으로 인한 차별은 24.3%로 그 다음이었다. 가정형편이나 주거지역, 장애 또는 문제행동으로 인한 차별은 낮게 인식하였다. 남, 여 아동의 차별 영역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아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30.0%로 가장 높게 지각한 반면, 여아는 외모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33.9%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여아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27.1%)을 두 번째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남아가 가장 높게 지각한 학교성적에 의한 차별은 여아의 경우 24.6%이었다. 반면 남아는 외모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22.1%)을 성적에 의한 차별보다 낮게 지각하였다. 남아는 차별의 순위가 학업성적, 외모, 연령 순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외모, 연령, 학업성적순으로 차별을 지각하였다.

차별에 대한 남녀 성차이가 나타난 것은 유일하게 연령에 따른 차별에서만 나타났다 ($X^2=10.446, p<.05$) 연령에 대한 차별 인식은 남아는 15.7%인데 비해 여아는 33.0%로 여아가 남

아보다 연령에 따른 차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과 학업성적에 대한 차별 지각에 남녀 성차는 발견되지 않아 남녀 아동이 비슷한 수준에서 차별을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아동성별에 따른 차별 인식

단위 : 명 (%)

내용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계	카이 검증
성별로 인한 차별	남	60 (49.6)	42 (34.7)	16 (13.2)	3 (2.5)	121 (100.0)	.518
	여	62 (52.5)	41 (34.7)	13 (11.0)	2 (1.7)	118 (100.0)	
	전체	122(51.0)	83(34.7)	29(12.1)	5(2.1)	239(100.0)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남	36 (30.0)	42 (35.0)	36 (30.0)	6 (5.0)	120 (100.0)	1.089
	여	38 (32.2)	43 (36.4)	29 (24.6)	8 (6.8)	118 (100.0)	
	전체	74(31.1)	85(35.7)	65(27.3)	14(5.9)	238(100.0)	
연령으로 인한 차별	남	43 (35.5)	59 (48.8)	16 (13.2)	3 (2.5)	121 (100.0)	10.446*
	여	38 (32.2)	41 (34.7)	32 (27.1)	7 (5.9)	118 (100.0)	
	전체	81(33.9)	100(41.8)	48(20.1)	10(4.2)	239(100.0)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	남	83 (68.6)	32 (26.4)	5 (4.1)	1 (.8)	121 (100.0)	5.930
	여	89 (75.4)	27 (22.9)		2 (1.7)	118 (100.0)	
	전체	172(72.0)	59(24.7)	5(2.1)	3(1.3)	239(100.0)	
주거형태로 인한 차별	남	87 (71.3)	31 (25.4)	3 (2.5)	1 (.8)	122 (100.0)	3.111
	여	94 (79.7)	20 (16.9)	2 (1.7)	2 (1.7)	118 (100.0)	
	전체	181(75.4)	51(21.3)	5(2.1)	3(1.3)	240(100.0)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남	50 (41.0)	32 (26.2)	27 (22.1)	13 (10.7)	122 (100.0)	2.501
	여	46 (39.0)	32 (27.1)	33 (28.0)	7 (5.9)	118 (100.0)	
	전체	96(40.0)	64(26.7)	60(25.0)	20(8.3)	240(100.0)	
장애 혹은 행동문제로 인한 차별	남	91 (75.2)	25 (20.7)	4 (3.3)	1 (.8)	121 (100.0)	1.514
	여	91 (77.1)	19 (16.1)	6 (5.1)	2 (1.7)	118 (100.0)	
	전체	182(76.2)	44(18.4)	10(4.2)	3(1.3)	239(100.0)	
종교로 인한 차별	남	95 (78.5)	20 (16.5)	3 (2.5)	3 (2.5)	121 (100.0)	5.531
	여	99 (83.9)	13 (11.0)	6 (5.1)		118 (100.0)	
	전체	194(81.2)	33(13.8)	9(3.8)	3(1.3)	239(100.0)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	남	104 (86.0)	15 (12.4)	1 (.8)	1 (.8)	121 (100.0)	1.075
	여	100 (84.7)	14 (11.9)	3 (2.5)	1 (.8)	118 (100.0)	
	전체	204(85.4)	29(12.1)	4(1.7)	2(.8)	239(100.0)	

*p<.05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별 인식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별 인식을 보면 <표 2>와 같다. 연령에 따른 아동의 차별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신체장애, 같이 사는 가족 구성, 종교에 대한 차별인식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외에 성별($X^2=19.931$, $P<.01$) 학교성적($X^2=60.773$, $P<.001$), 연령차별($X^2=21.390$, $P<.01$), 가정의 경제적 형편($X^2=14.417$, $P<.01$), 사는 곳($X^2=11.170$, $P<.05$), 외모나 신체조건 외모($X^2=21.016$, $P<.01$)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별 인식

단위 : 명 (%)

내용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계	카이 검증
성별로 인한 차별	초5	48(71.6)	15(22.4)	4(6.0)		67(100.0)	19.931**
	중2	41(48.8)	28(33.3)	12(14.3)	3(3.6)	84(100.0)	
	고2	33(37.5)	40(45.5)	13(14.8)	2(2.3)	88(100.0)	
	전체	122(51.0)	83(34.7)	29(12.1)	5(2.1)	239(100.0)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초5	44(68.7)	18(26.9)	3(4.5)	2(3.0)	67(100.0)	60.773***
	중2	19(22.9)	33(39.8)	25(30.1)	6(7.2)	83(100.0)	
	고2	11(12.5)	34(38.6)	37(42.0)	6(6.8)	88(100.0)	
	전체	74(31.1)	85(35.7)	65(27.3)	14(5.9)	238(100.0)	
연령으로 인한 차별	초5	37(55.2)	22(32.8)	7(10.4)	1(1.5)	67(100.0)	21.390**
	중2	24(28.6)	35(41.7)	20(23.8)	5(6.0)	84(100.0)	
	고2	20(22.7)	43(48.9)	21(23.9)	4(4.5)	88(100.0)	
	전체	81(33.9)	100(41.8)	48(20.1)	10(4.2)	239(100.0)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	초5	55(82.1)	8(11.9)	2(3.0)	2(3.0)	67(100.0)	14.417*
	중2	62(73.8)	22(26.2)			84(100.0)	
	고2	55(62.5)	29(33.0)	3(3.4)	1(1.1)	88(100.0)	
	전체	172(72.0)	59(24.7)	5(2.1)	3(1.3)	239(100.0)	
주거형태로 인한 차별	초5	55(82.1)	10(14.9)		2(3.0)	67(100.0)	11.170*
	중2	68(80.0)	15(17.6)	2(2.4)		85(100.0)	
	고2	58(65.9)	26(29.5)	3(3.4)	1(1.1)	88(100.0)	
	전체	181(75.4)	51(21.3)	5(2.1)	3(1.3)	240(100.0)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초5	41(61.2)	11(16.4)	12(17.9)	3(4.5)	67(100.0)	21.016**
	중2	30(35.3)	23(27.1)	26(30.6)	6(7.1)	85(100.0)	
	고2	25(28.4)	30(34.1)	22(25.0)	11(12.5)	88(100.0)	
	전체	96(40.0)	64(26.7)	60(25.0)	20(8.3)	240(100.0)	
장애 혹은 행동문제로 인한 차별	초5	55(82.1)	7(10.4)	3(4.5)	2(3.0)	67(100.0)	7.303
	중2	65(76.5)	16(18.8)	4(4.7)		85(100.0)	
	고2	62(71.3)	21(24.1)	3(3.4)	1(1.1)	87(100.0)	
	전체	182(76.2)	44(18.4)	10(4.2)	3(1.3)	239(100.0)	
종교로 인한 차별	초5	61(91.0)	4(6.0)	2(3.0)		67(100.0)	7.550
	중2	67(78.8)	13(15.3)	3(3.5)	2(2.4)	85(100.0)	
	고2	66(75.9)	16(18.4)	4(4.6)	1(1.1)	87(100.0)	
	전체	194(81.2)	33(13.8)	9(3.8)	3(1.3)	239(100.0)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	초5	60(89.6)	4(6.0)	2(1.5)	1(1.5)	67(100.0)	5.264
	중2	72(84.7)	12(14.1)	1(1.2)		85(100.0)	
	고2	72(82.8)	13(14.9)	1(1.1)	1(1.1)	87(100.0)	
	전체	204(85.4)	29(12.1)	4(1.7)	2(.8)	239(100.0)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중 2아동이 29.1%로 가장 높았고, 초,고등학교 아동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은 고등학교 아동이 48.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37%, 초등학생은 7.5%이었다.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별에서도 중,고등학교 아동이 29.8%와 28.4%로 비슷한 수준의 차별을 지각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11.9%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지각하였다.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지각은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초등학생의 6%가 이 영역에서 차별을 인식하였다. 외모나 신체조건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중,고등학생이 비슷하게 발견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 아동도 22.4%에 이른다. 신체조건과 외모를 중시하게 되는 이 시기 아동의 발달특성과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가장 높게 지각한 차별은 외모나 신체조건(22.4%)이었다. 다음으로 연령차별로 11.9%이었다. 그리고 학업성적이었다. 중학교 아동의 경우 외모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과 성적에 의한 차별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에 의한 차이가 29%이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중학교아동은 성적과 외모와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이 비슷한 수준에서 관찰되던 것에서 외모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은 다소 감소한 반면, 학교성적에 의한 차별 인식이 48.8%로 현격하게 높아졌다. 성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동에게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차별에 대한 지각 양상이 변화하여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이 높게 지각되고 있으며 신체조건이나 외모에 대한 차별은 모든 연령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차별의 각 내용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아졌다.

2. 차별 행위자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차별을 경험한 후 정서

차별 행위를 누가 했는가에 대한 결과 분석은 <표 3>과 같다. 아동은 차별의 전 영역에서 친구에 의한 차별을 28.9%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교사가 16.7%이었다. 부모는 14.1%이다. 차별의 행위자를 성인과 아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부모를 포함 학교 및 학원교사에 의한 차별을 모두 합칠 경우 성인에 의한 또래친구에 의한 차별보다 높은 42.8%에 이른다. 아동은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교사, 부모, 친구, 학원교사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외모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은 남아, 여아 모두(54.7%) 친구에 의한 차별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연령별 분석을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동 모두 친구로부터 외모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45.0%)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학교성적으로 인해 친구로부터 차별받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중학교 남아(26.3%)에 비해 고등학교 남아의 인식(20.9%)이 낮았으나 여아의 경우는 그 반대이었다.

중학교 아동은 부모, 교사, 친구에 의한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친구에 의해 가정형편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응답이 관찰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인식이 고등학교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았다. 가정형편이나 주거형태, 장애 혹은 행동문제, 그리고 종교로 인한 차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 간에 응답의 차이는 있으나 부모, 교사, 이웃 등 누구에 의해서도 차별이 높게 지각되지는 않았다.

<표 3> 차별 행위자에 대한 아동의 인식

단위 : 명 (%)

내용	구분	부모	학교 교사	학원 교사	친구	이웃	기타	계	
성별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1(12.5)	1(12.5)	1(12.5)	3(37.5)	2(25.0)		8(100.0)
	중	남	4(30.8)	2(15.4)	5(38.5)	2(15.4)			13(100.0)
		여	3(25.0)	2(16.7)	3(25.0)		2(16.7)	2(16.7)	12(100.0)
	고	남	1(7.1)	4(28.6)	4(28.6)	2(14.3)		3(21.4)	14(100.0)
여			2(50.0)		1(25.0)		1(25.0)	4(100.0)	
전체		9(17.6)	11(21.6)	13(25.5)	8(15.7)	4(7.8)	6(11.8)	51(100.0)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2(22.2)		2(22.2)	3(33.3)	2(22.2)		9(100.0)
	중	남	4(21.1)	4(21.1)	3(15.8)	5(26.3)	2(10.5)	1(5.3)	19(100.0)
		여	11(35.5)	4(12.9)	7(22.6)	4(12.9)	1(3.9)	4(12.9)	31(100.0)
	고	남	8(18.6)	17(39.5)	7(16.3)	9(20.9)		2(4.7)	43(100.0)
여		3(14.3)	7(33.3)	5(23.8)	4(19.0)		2(9.5)	21(100.0)	
전체		28(22.8)	32(26.0)	24(19.5)	25(20.3)	5(4.1)	9(7.3)	123(100.0)	
연령으로 인한 차별	초	남			1(100.0)			1(100.0)	
		여	4(36.4)			3(27.3)	3(27.3)	1(9.1)	11(100.0)
	중	남				1(14.3)	1(14.3)	5(71.4)	7(100.0)
		여	4(12.1)	4(12.1)	3(9.1)		7(21.2)	15(45.5)	33(100.0)
	고	남	1(6.7)	4(26.7)	3(20.0)	1(6.7)		6(40.0)	15(100.0)
여		5(25.0)	3(15.0)			4(20.0)	8(40.0)	20(100.0)	
전체		14(16.1)	11(12.6)	6(6.9)	6(6.9)	15(17.2)	35(40.2)	87(100.0)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	초	남			2(100.0)			2(100.0)	
		여			2(50.0)	2(50.0)		4(100.0)	
	중	남							
		여							
	고	남		2(33.3)	1(16.7)	1(16.7)	1(16.7)	1(16.7)	6(100.0)
여		1(33.3)		1(33.3)	1(33.3)			3(100.0)	
전체		1(6.7)	2(13.3)	2(13.3)	6(40.0)	3(20.0)	1(6.7)	15(100.0)	
주거형태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2(50.0)	2(50.0)	4(100.0)	
	중	남				1(50.0)	1(50.0)	2(100.0)	
		여				1(50.0)	1(50.0)	2(100.0)	
고	남		2(50.0)	1(25.0)	1(25.0)		4(100.0)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초	남			3(100.0)			3(100.0)	
		여	1(5.3)			11(57.9)	1(5.3)	6(31.6)	19(100.0)
	중	남	2(10.5)	1(5.3)	1(5.3)	11(57.9)		4(21.1)	19(100.0)
		여	3(9.7)	1(3.2)		14(45.2)	2(6.5)	11(35.5)	31(100.0)
	고	남	3(10.0)	3(10.0)	1(3.3)	17(56.7)		6(20.0)	30(100.0)
여			2(13.3)		8(53.3)		5(33.3)	15(100.0)	
전체		9(7.7)	7(6.0)	2(1.7)	64(54.7)	3(2.6)	32(27.4)	117(100.0)	
장애 혹은 행동문제로 인한 차별	초	남			1(100.0)			1(100.0)	
		여				4(50.0)	2(25.0)	2(25.0)	8(100.0)
	중	남				1(100.0)			1(100.0)
		여	2(40.0)			3(60.0)			5(100.0)
	고	남		2(50.0)	1(25.0)	1(25.0)			4(100.0)
여		1(50.0)	1(50.0)					2(100.0)	
전체		3(14.3)	3(14.3)	1(4.8)	10(47.6)	2(9.5)	2(9.5)	21(100.0)	

내용	구분	부모	학교 교사	학원 교사	친구	이웃	기타	계	
종교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2(50.0)	2(50.0)		4(100.0)	
	중	남			2(50.0)	1(25.0)	1(25.0)	4(100.0)	
		여		1(33.3)			2(66.7)	3(100.0)	
	고	남		2(40.0)	1(20.0)	1(20.0)		5(100.0)	
		여		2(50.0)	1(25.0)	1(25.0)		4(100.0)	
전체			5(25.0)	2(10.0)	6(30.0)	3(15.0)	4(20.0)	20(100.0)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1(16.7)		1(16.7)	2(33.3)		2(33.3)	6(100.0)
	중	남							
		여		1(50.0)	1(50.0)				2(100.0)
	고	남		1(33.3)	2(66.7)				3(100.0)
		여		1(100.0)					1(100.0)
전체		1(8.3)	3(25.0)	4(33.3)	2(16.7)		2(16.7)	12(100.0)	
계		65(14.1)	77(16.7)	55(12.0)	133(28.9)	36(7.8)	94(20.4)	460(100)	

아동이 차별은 경험한 후 어떤 기분이었는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동은 차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짜증과 화가 난다’ 경우(47.9%)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물건을 부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17.5%로 나타났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응답도 14.2%이었다. 성별에 따라 분석하면 흥미롭게도 외모나 신체조건에서만 남아의 10.3%만이 ‘울고 싶다’고 응답했을 뿐 이외의 다른 차별 영역에서는 단 한명의 남아도 ‘울고싶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에 남아는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응답이 16.2%인 반면에 여아는 6.2%에 불과하였다. 여아는 ‘짜증과 화가 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다. 남아가 ‘짜증과 화가 난다’고 응답한 것은 19.4%이었다. 각 차별 영역을 망라해서 ‘죽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은 모두 7.9%에 이르렀다.

<표 4> 차별을 경험한 후 정서

단위 : 명 (%)

내용	구분	울고 싶다	짜증과 화남	죽고 싶은 각	물건을 부수고 싶은 충동	아무렇지도 않음	기타	계
성별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2(50.0)		1(25.0)	1(25.0)		4(100.0)
	중	남		5(55.6)		3(33.3)	1(11.1)	9(100.0)
		여	1(14.3)	3(42.9)	1(14.3)	1(14.3)	1(14.3)	7(100.0)
	고	남		5(45.5)		2(18.2)	4(36.4)	11(100.0)
		여		1(33.3)	1(33.3)	1(33.3)		3(100.0)
전체		3(8.8)	14(41.2)	3(8.8)	8(23.5)	6(17.6)	34(100.0)	
성적으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2(40.0)	2(40.0)			1(20.0)	5(100.0)
	중	남		4(33.3)	1(8.3)	5(41.7)	1(8.3)	12(100.0)
		여	4(21.1)	7(36.8)	2(10.5)	3(15.8)	1(5.3)	19(100.0)
	고	남		14(46.7)	1(3.3)	9(30.0)	4(13.3)	30(100.0)
		여	1(7.7)	11(84.6)			1(7.7)	13(100.0)
전체		7(8.9)	38(48.1)	4(5.1)	17(21.5)	8(10.1)	79(100.0)	

내용	구분		울고 싶다	짜증과 화남	죽고 싶은 각	물건을 부수고 싶은 충동	아무렇지도 않음	기타	계
	초	남 여							
연령차별	초	남		1(100.0)					1(100.0)
		여		4(57.1)			2(28.6)	1(14.3)	7(100.0)
	중	남		2(33.3)	1(16.7)		3(50.0)		6(100.0)
		여	2(10.5)	12(63.2)	1(5.3)	1(5.3)	3(15.8)		19(100.0)
	고	남		5(41.7)	2(16.7)	4(33.3)	1(8.3)		12(100.0)
		여		9(69.2)		1(7.7)	2(15.4)	1(7.7)	13(100.0)
전체		2(3.4)	33(56.9)	4(6.9)	6(10.3)	11(19.0)	2(3.4)	58(100.0)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	초	남				2(100.0)			2(100.0)
		여			2(100.0)				2(100.0)
	중	남							
		여							
	고	남		1(25.0)		2(50.0)	1(25.0)		4(100.0)
		여		1(50.0)		1(50.0)			2(100.0)
전체		2(20.0)	2(20.0)	5(50.0)	1(10.0)			10(100.0)	
주거형태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2(100.0)			2(100.0)
	중	남		1(100.0)					1(100.0)
		여	1(100.0)						1(100.0)
	고	남		1(33.3)		2(66.7)			3(100.0)
		여	1(50.0)	1(50.0)					2(100.0)
전체		2(22.2)	3(33.3)		4(44.4)			9(100.0)	
장애 혹은 행동문제로 인한 차별	초	남					1(100.0)		1(100.0)
		여		2(50.0)	2(50.0)				4(100.0)
	중	남		1(100.0)					1(100.0)
		여		2(66.7)			1(33.3)		3(100.0)
	고	남		1(33.3)		2(66.7)			3(100.0)
		여		1(50.0)			1(50.0)		2(100.0)
전체		7(50.0)	2(14.3)	2(14.3)	3(21.4)			14(100.0)	
종교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2(100.0)					2(100.0)
	중	남		2(66.7)			1(33.3)		3(100.0)
		여		1(50.0)			1(50.0)		2(100.0)
	고	남		1(33.3)		2(66.7)			3(100.0)
		여	1(33.3)	1(33.3)		1(33.3)			3(100.0)
전체		1(7.7)	7(53.8)		3(23.1)	2(15.4)		13(100.0)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	초	남							
		여	2(66.7)		1(33.3)				3(100.0)
	중	남							
		여	1(100.0)						1(100.0)
	고	남				2(100.0)			2(100.0)
		여		1(100.0)					1(100.0)
전체		3(42.9)	1(14.3)	1(14.3)	2(28.6)			7(100.0)	
계		26(8.6)	145(47.9)	24(7.9)	53(17.5)	43(14.2)	12(4.0)	303(100)	

3. 아동의 차별수준 평가 및 차별 해소에 대한 의견

본 조사는 아동에 대한 차별 수준을 100만점으로 할 때 어느 정도의 차별을 지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평균60점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지각하였고 중학교 2학년 아동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아는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낮게 지각하였다.

차별수준에 대한 아동응답의 점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대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은 10점대와 20점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지각한 비율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높았다. 60점대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65.7%인데, 10과 20점대의 응답비율이 22.3%이며 나머지 점수대는 고른 분포이었다. 반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60점대 이하 응답비율은 41.2%로 초등학생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반면에 70점대와 80점대의 비율이 31.0%로 차별에 대한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60점대 이하가 60.2%로 초등학교 아동과 비슷하였지만 고등학교 2학년의 우리나라 차별수준에 대한 점수는 40점대~80점대까지가 79.6%에 이르렀다. 특히 50~80점대로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동에 비해서 집단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의 주관적 생각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모든 연령에서 ‘공부잘할 때’ ‘성적이 오를 때’ 등으로 성적과 관련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동 중에는 ‘뭘 시키거나 요구할 때’, ‘인터넷상에서’, ‘PC방에 갔을 때’, ‘호텔, 비행기, 음식점, 등에서 특별한 손님이 될 때’,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았고, 흥미롭게도 경제력과 관련된 진술이 많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을 때’ 어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주관적 질문에는 모든 조사대상 아동집단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경우 ‘차별에 대해 벌금을 물도록 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별해소가 불가능하다’, ‘어른도 어릴 때 차별받았기 때문 아동을 차별하는 것’은 부정적 견해가 다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어른의 인식전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아동은 차별의 전 영역에서 친구에 의한 차별을 28.9%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교사가 16.7%이었다. 부모는 14.1%이다. 차별의 행위자를 성인과 아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부모를 포함 학교 및 학원교사에 의한 차별을 모두 합칠 경우 성인에 의한 또래 친구에 의한 차별보다 높은 42.8%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차별을 경험한 후 차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짜증과 화가 난다’가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물건을 부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죽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도 의미있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차별수준에 대해서 아동은 평균60점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연령이 증가면서 차별수준에 대한 집단내 인식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점수로 본 아동의 차별 수준인식

단위 : 명 (%)

구분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계
초5	전체	3 (4.5)	7 (10.4)	8 (11.9)	5 (7.5)	6 (9.0)	9 (13.4)	6 (9.0)	3 (4.5)	9 (13.4)	7 (10.4)	4 (6.0)	67 (100)
	남		7 (20.6)	4 (11.8)	3 (8.8)	2 (5.9)	2 (5.9)	3 (8.8)		6 (17.6)	5 (17.7)	2 (5.9)	34 (100)
	여	3 (9.1)		4 (12.1)	2 (6.1)	4 (12.1)	7 (21.2)	3 (9.1)	3 (9.1)	3 (9.1)	2 (6.1)	2 (6.1)	33 (100)
중2	전체		2 (2.3)	6 (6.8)	4 (4.6)	7 (8.0)	10 (11.5)	7 (8.0)	15 (17.2)	12 (13.8)	8 (9.1)	15 (17.2)	86 (100)
	남		1 (2.4)	3 (7.3)		4 (9.8)	4 (9.8)	6 (14.6)	10 (24.4)	5 (12.2)	4 (9.8)	4 (9.8)	41 (100)
	여		1 (2.2)	3 (6.7)	4 (8.9)	3 (6.7)	6 (1.3)	1 (2.2)	5 (11.1)	7 (15.6)	4 (8.9)	11 (24.4)	45 (100)
고2	전체		3 (3.4)	1 (1.1)	4 (4.5)	11 (12.5)	16 (18.2)	18 (20.5)	15 (17.0)	11 (12.5)	6 (6.8)	3 (3.4)	88 (100)
	남		1 (2.1)		4 (8.3)	3 (6.3)	6 (12.5)	13 (27.1)	9 (18.8)	4 (8.3)	5 (10.4)	3 (6.3)	48 (100)
	여		2 (5.0)	1 (2.5)		8 (20.0)	10 (25.0)	5 (12.5)	6 (15.0)	7 (17.5)	1 (2.5)		40 (100)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차별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정고 실제로 아동자신은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은 외모나 신체조건과 학교성적, 그리고 연령에 에 의한 차별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나 주거지역, 장애 또는 문제행동으로 인한 차별을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09)의 아동의 경우 성(26.1%), 연령(24.7%), 학교성적(19.7%), 신체/외모적 조건(18.2%)에 따른 차별경험이 20% 내외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적인 교육환경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아동의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성별보다는 연령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남녀 성차이가 나타난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서만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연령에 따른 차별을 높게 인식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은 신체장애, 같이 사는 가족 구성, 종교에 대한 차별인식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외에 성별, 학교성적, 연령차별, 가의 경제적 형편, 사는 곳, 외모나 신체조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차별의 내용에 따라 연령차이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차별에 대한 지각 양상이 변화하여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이 높게 지각되고 있으며 신체조건이나 외모에 대한 차별은 모든 연령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0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보고와 부분적으

로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형편이나 주거형태, 장애 혹은 행동문제, 그리고 종교로 인한 차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 간에 응답의 차이는 있으나 부모, 교사, 이웃 등 누구에 의해서도 차별이 높게 지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친구가 주요한 차별행위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은 외모 및 신체 조건으로 인해서 아동자신을 차별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동의 또래 관계의 중요성 및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집단따돌림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들에게 사회적 관계 및 개인별 차이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교교사와 부모에 의한 차별에 대해 주관적 질문과 연계하면 자신의 역량을 지닐때 차별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차별이 부정적 자기지각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특히 차별 경험 후 물건을 부수고 싶거나 죽고싶다는 등 극단적인 공격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동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적 관심을 요청한다.

참고문헌

- 김선택(2010). 법학의 측면에서 본 헌법과 아동, 헌법의 ‘아동’ 수용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 위원회.
- 모상현, 김희진, 이민희, 최윤진, 황옥경(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연구 IV.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5). 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이옥(2010). 한국아동의 삶의 지표, 한국아동학회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아동학회.
- 이재연(2010).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아동의 문제, 헌법의 ‘아동’ 수용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 위원회.
- 조셉조네이도(2011). 만들어진 아동, 구은혜 역, 마고북스.
- 황옥경(201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유엔의 권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육아선진화 포럼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 Breen, C.(2004). Refugee Law in Ireland : Disregarding the Rights of the Child-Citizen, Discriminating against the Rights of the Child, Journal of Refugee Law, 15(4).
- Breen, C.(2006). Age Discrimination and Children’s Rights, Ensuring Equity and Acknowledging Difference. Maritnus Nijhoff Publishers.
- Eckelaar,J.(1989). The Emergence of Children’s Right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6.
- Freedman, S.(2003). The Age of Equity, In S. Freeman and S. spencer(eds), Age as and Equality Issue : Legal PublicyPerpectives, Oxford, Hart Publishing.
- Goldstein, J.Freud, A. & Solmit, A. (1980). A Beyond in the Best Interests of te Child, London, Burnett Books, Newyork.
- Holt, J. (1993). Escape from Childhood : The Needs and Rights of Children, Harnomsworth, Penguin, 1975.

◆ 종합토론자료 ◆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송 순 교수(원광대학교)

이경희 교수(강원대학교)

안영하 교수(목포대학교)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송 순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교수)

아동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다. 법 제도와 상관없이 다른 조건 속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다. 1989년 11월20일 UN 총회에서 어린이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국제법으로 승인된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1997년 아동권리학회를 설립하고 1997년 2월 아동권리 협약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이후 2005년까지 15회에 걸친 월례회에서 다양한 주제와 대상 아동의 권리에 대해 발표회를 가졌고 아동권리학회가 창립된 이래 매년 춘추 년 2회 학술대회에서 아동권리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표 1> 참조). 40권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아동권리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주제어에 ‘아동권리’가 포함된 논문들을 창간호~2010년 4권4호까지 정리해보았다(<표 2~4> 참조).

뜻밖에도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생존권 관련 주제가 희소하였다. 2010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유아’는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특별한 흥미와 능력 및 취약성을 가지는 사회적 행위자이며, 그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고취 시키고자 하였음(서영숙, 2010)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입장에서 아동 권리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안전 재난에 대한 아동권리를 학술대회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고, 아주 소수의 게재논문에서 다루고 있었다. 우리는 행복하게 생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2011년 춘계 학술대회주제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장애아와 다문화가정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논의 하고 있다.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논의하고 있다.

‘아동권보장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에서 헌법, 민사법, 형사법, 복지관련법을 검토하고 대안을 지적했다. 위 발표논문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보고서 분석에서도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기초보건 및 복지, ...특별보호조치에서 미혼모(출산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 행정적 조치 마련을 언급하고 있으나 ‘출생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생존력이 가장 취약한 대상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것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제도권 교육 안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자는 관점은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의 경우인 것 같다.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경우는 아버지문화 어머니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다문화가정 아동 뿐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문화적 다양

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아동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적 선택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복지는 수동적 적응을 위한 복지대책들이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권리적 입장은 현 시점에서는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장에서 차별없는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문화적 보편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 수업이나 부모교육 등이 다문화 아동이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개설되어 결혼이주여성들과 이주노동자 자녀와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하고 부모역할을 배우고 부모역할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이상에서는 한국어 수업과 동시에 외국어 수업을 방과 후 학습 등에서 다양하게(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등) 개설하고 모든 아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 차별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UNDP가 국내총생산(GDP), 교육, 평균수명을 집계해 HDI를 발표하는데 2010년 1월 5일 발표한 2009 HDI에 한국은 2006년 이후 26위에 머물고 있다¹⁾. 그러나 행복지수는 10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http://cafe.naver.com/honewgroup/2177>). 아일랜드 생활정보잡지에 의하면 한국의 삶의 질은 194개국 중 42위로 전년도(32위)에 비해 10위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또한 세계 최하위권이고, 자살률은 세계 1위이다. 작년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81위였으며, 외국인이 꼽은 최악의 도시 3위이다(민주당 김미경대변인). 물질적 생활이 향상되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삶의 질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사회가 소득향상이 되었지만 생존 유지를 위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의미이다. 전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나눔 배려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의 해소와 특정 유명인도 평범하게 살 권리보장, 참정권이 없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 한국 7 장애인 고용 공단 발표 장애인 고용률(36.0%) 실업률(6.6%)로서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1/2 실업률은 2배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5%이고 OECD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2%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OECD국가는 평균1.3% 우리나라 0.1%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부모는 당당하게 학부모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부끄럽다?’ ‘장애인은 손보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중도 장애인은 읽기속도(점자 책)가 느낌에도 선천적 장애인과 같은 시간 안에 시험 답안을 작성해야한다’ 와 같은 능력 차이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차이가 차별대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차별로 인한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정책적 제안을 거듭할 뿐 아니라 ‘차별’과 ‘차이’에 대한 대 국민적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1위 노르웨이 2위 호주 3위 아이슬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네델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일본. 미국 13위.

<표 1>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술대회 주제들

1997.05.02	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1997.11.14	97추계 학술대회 ‘아동의 권리와 놀이문화’
1998.06.12	98춘계 학술대회 ‘아동권리지표개발’
1998.11.20	98추계 학술대회 ‘아동권리지표개발 II’
1999.06.11	99춘계 학술대회 ‘세계의 아동권리교육 현황’
1999.11.19	99추계 학술대회 ‘UN아동권리협약 제1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0.04.28	00춘계 학술대회 ‘아동방임의 현실과 아동의 권리’
2000.11.18	00추계 학술대회 ‘아동 최선의 이익’
2001.06.08	01춘계 학술대회 ‘아동 보호권 - 아동양육의 최소조건’
2001.11.16	01추계 학술대회 ‘아동의 참여권’
2002.04.26	02춘계 학술대회 ‘아동권리 모니터링’
2002.11.22	02추계 학술대회 ‘아동중심 프로그램’
2003.04.25	03춘계 학술대회 ‘대중매체보도와 학술연구대상으로서의 아동’
2003.11.21	03추계 학술대회 ‘영유아 보육, 교육과 아동의 권리’
2004.04.30	04춘계 학술대회 ‘저출산 고이혼 사회에서 아동의 삶과 권리’
2004.11.19	04추계 학술대회 ‘한국과 일본의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2005.06.24	05춘계 학술대회 ‘아동정책진단과 향후 과제’
2005.11.18	05추계 학술대회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각국의 모니터링 체제 분석’
2006.05.19	06춘계 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각국의 모니터링 체제 분석’
2006.10.27	06 추계 학술대회 ‘아동의 삶과 아동정책 - 아동정책의 한계와 과제’
2007.04.21	07 춘계10주년기념학술대회 ‘한국의 아동권리 :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2007.11.23	07 추계 학술대회 ‘아동의 교육권, 실상과 대안’
2008.04.18	08 춘계 학술대회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서비스’
2008.11.28	08 추계 학술대회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2009.05.01	09 춘계 학술대회 ‘한국 아동의 삶의 질’
2009.11.19 ~ 20	유엔아동권리협약 20주년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아동권리의 현재와 미래’
2010.05.07	10 춘계 학술대회 ‘아동의 참여권’
2010.10.01	10 추계 학술대회 ‘아동의 권리와 보육의 전문성’

<표 2> 아동권리학회지에 발표된 아동권리 관련논문

순서	저자	논문제목	권호수
1	이배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997.1(1)
2	이재연 강성희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1997.1(1)
3	신우철	아동의 권리 -한국의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1997.1(1)
4	안동현	아동의 권리 -필요성, 역사성 및 과제-	1997.1(1)
5	이기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의 원리와 이해 방안 -교육권을 중심으로-	1997.1(1)
6	이용교 이희길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	1997.1(1)
7	이재연	각 나라의 아동권리 협약 실천 상황	1997.1(2)
8	황성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 문제 -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1997.1(2)
9	정현숙	아동의 놀 권리와 멀티미디어	1997.1(2)
10	이용교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 공간	1997.1(2)
11	김문환	어린이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참가	1997.1(2)
12	김정래	교육권과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철학적 논의-	1998.2(1)
13	이재연 이소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부모·교사의 인식	1998.2(1)
14	김정래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의미	1998.2(2)
15	김정래 최영희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1998.2(2)
16	한지숙 홍은주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실현	1998.2(2)
17	김용자	인권의 의미와 발전과정	1998.2(2)
18	이 옥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의 보장 현황 -유럽연합 국가들의 보장 현황-	1998.2(2)
19	조홍식	가족유지서비스와 아동권리	1999.3(1)
20	김정래	권위적 간섭주의와 아동의 참여권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당화 논의-	1999.3(1)
21	성정숙	학교에서의 아동권리실태에 관한 연구	1999.3(1)
22	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1999.3(1)
23	이재연	소파 방정환과 한국아동의 권리	1999.3(2)
24	조홍식	아동권리 신장 방안	1999.3(2)
25	변용찬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1999.3(2)

<표 3> 아동권리학회지에 발표된 아동권리 관련논문

순서	저자	논문제목	권호수
26	김정래	아동권리협약 채택 10주년과 한국 아동의 권리	1999.3(2)
27	안동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1999.3(2)
28	이기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1999.3(2)
29	김훈숙	대학생의 아동학대행동의 이해와 권리인식과의 관계	2000.4(1)
30	김정래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2000.4(1)
31	김재웅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 학교와 홈스쿨을 중심으로	2000.4(2)
32	조홍식	국가정책 측면에서의 아동최선의 이익	2000.4(2)
33	김상용	부모의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자녀의 복리)	2000.4(2)
34	하승민	아동의 놀이와 권리-조화의 방향에 대한 탐색-	2001.5(1)
35	정대련 최은규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아동 권리에 관한 연구	2001.5(2)
36	하승민	아동권리측면의 시설보호아동의 현황 분석	2002.6(1)
37	이 옥	아동에 의한 아동 권리 모니터링	2002.6(1)
38	김정래	아동의 놀 권리 - 그 교육적 필요성의 철학적 정당화 논의 -	2002.6(1)
39	정준교	학생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 : 학생인권 선언을 중심으로	2002.6(1)
40	정현숙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2002.6(2)
41	정준교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학생 청소년의 인권 신장 가능성 :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2003.7(1)
42	황옥경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 방안	2003.7(1)
43	이기범	아동권리의 보편성과 다원 문화의 구성적 긴장	
44	박명숙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고찰한 현행 아동학대서비스에 대한 검토	
45	이 옥	영아의 보호권 신장을 위한 가정보육모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46	기타 아키토	일본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현황과 과제	
47	황옥경	대중매체와 아동권리	
48	정준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본 NEIS와 학생청소년인권	2004.8(2)
49	정현숙	이혼가족 아동의 권리향상 방안	2004.8(2)
50	이용교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의 신장 방안	2004.8(2)

<표 4> 아동권리학회지에 발표된 아동권리 관련논문

순서	저자	논문제목	권호수
51	우남희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2004.8(2)
52	이율이 이완정	아동 보호권의 관점에서 본 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현황과 문제점	2004.8(3)
53	양심영	아동권리에 대한 지각성 연구	2004.8(4)
54	이재연 황옥경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2004.8(4)
55	이재연	외국의 청소년 권리신장 활동과 모니터링기구 운영사례연구	2005.9(1)
56	황옥경	지방자치 정부의 아동권리 조례 제정의 함의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2005.9(2)
57	남미애	비행청소년이 인식하는 사법처리단계별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사항	2005.9(2)
58	이완정	보육시설 영유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육종사자 윤리강령 연구	2005.9(4)
59	김정래	보편적 복지권으로서 교육권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논의	2005.9(4)
60	양영임 우남희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2005.9(4)
61	김지혜	청소년 가출에 따른 인권침해 연구	2006.10(1)
62	이재연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음부즈퍼슨 제도 연구	2006.10(1)
63	김영명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방식 비교·분석	2006.10(3)
64	강영심 황순영 이태현	정신지체아의 발달권 증진을 위한 또래갈등 해결전략 연구	2006.10(3)
65	이지수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인권의식	2006.10(3)
66	하승수 이혜원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친권상실관련 판례분석	2007.11(2)
67	김젤나 이재연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와 적응과의 관계	2007.11(2)
68	이재연 김효진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철회를 위한 과제	2008.12(1)
69	김숙자 박현진	5세 유아들의 유치원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권교육 관련내용과 교수-학습방법 연구	2008.12(4)
70	강현아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에 대한 논쟁	2009.13(1)
71	장혜림 김성천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9.13(2)
72	김광혁	한국 아동의 생존권 : 빈곤 및 가족, 주거환경, 안전, 건강 및 의료의 실태 및 변화 추이	2010.14(1)
73	하승민	아동복지재정측면에서의 사회보장권 조망	2010.14(1)
74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10.14(2)
75	황옥경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2010.14(4)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경 희

(강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아동권리학회의 아동권리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권리”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네 가지 주제별 접근은 시의적절한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기보다 내용이 다른 네가지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토론해야한다는 이학회의 권유에 의해 토론은 자연스럽게 포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두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원고가 도착한 순서대로 두개의 토론에 임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주제 “아동권의 입법적·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이 주제는 아동의 권리에 관련된 헌법, 민사법, 형사법, 복지관련법을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아동권리관련법보완내지는 조치 등 개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은 우리학회회원들의 오랜 숙원이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아동관련법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합니다.

토론자는 법전공은 아니지만 아동 권리법에 관한 지식으로는 이 주제에 나열된 우리나라 현 아동관련 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특히, 우리(아동학전공자와 아동권리학회회원들)가 숙원하고 있는 아동 관련법에 관하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관련법을 정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원고의 결론 내용 모두 관련법 말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선결하여야 할 것이다(1 ‘헌법)

...따라서 관련법이나 학칙을 통하여 아동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도록 입법적·행동적 보완이 필요하다(2. 종교자유)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민사법 1) 면접교섭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의사표명권))

- “... 제33조 제1항의 등록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시급하다 (3.형사법, 1) 아동 포르노법)”

-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4. 복지관련법, 4) 관련법의 한계)그외 1) 아동복지법. 4. 가정환경 및 대안교양육 7. 특별보호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5. 기초보건 및 복지법) 등 아동권리관련법 보완 내지는 조치 등 개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결론의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은 법전공자가 아닌 우리회원들 모두가 이미 그(입법적 보완내지는 법 개의정 등)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나 실현을 그리고 아동 관련법제정 절차를 위하여, 우리 학회의 구체적인 노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학회차원에서의 어떠한 접근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동권리학회회원 모두의 바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광범위하게 아동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조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읽고 나서 연구 주제,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도구와 결론 도출에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연구내용은 “일반적인 아동 차별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주 내용이므로 이에 적합하게 “(학교의)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반응” 등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의 “이해” 보다 더 주제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인지 그리고 아동이 조사내용의 차별에 대한 이해도는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을 관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표본으로 선정된 연구대상들의 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와 정서적 반응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자는 이해하였습니다.

둘째, 동일한 연구도구로 연령은 물론 발달단계가 다른 초·중·고생을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므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 동일한 도구로 측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선행연구들의 뒷받침이 생략되어 있음도, 토론자로 하여금 이 연구결과의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특히 학교현장에서 경험한 일반적이 차별대상이 친구라는 결론은 아동들의 학교생활지도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 영 하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동학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선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내용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종합토론자이다 보니 아동학에 관하여는 잘 모르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법을 전공하고 있는 법학자의 입장에서 아동과 관련된 민법적 시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종합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가족법에서 아동의 권리에 국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만 어떤 제도나 규정을 논의할 때 부수적으로 아동의 문제도 같이 논의되었지만 김용화 교수님의 발표내용과 같이 제 개인적인 판단도 아동은 법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법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출생하기만 하면 권리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주체(혹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족법에서는 아동은 객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즉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누가 어떻게 아동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친권과 양육권 및 입양의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간다면 친권은 부모가 가지는 것이므로 누가 부모인가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과 관련하여 가족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보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 어떻게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여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친권을 공동행사하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누가 아동을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및 입양을 통하여 양자를 할 때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문제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혹시라도 다음에 제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법학계의 시각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고려(아동의 의사를 포함하여)보다는 남녀평등의 문제로 접근하였습니다. 즉 아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논의의 초점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양육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1960년 시행된 제정민법에서는 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다고 하여 남녀차별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991년 시행된 개정법률에서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남녀차별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다투어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서로 양육책임을 미루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에는 반드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정하게 되어있었지만 이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의상 이혼에는 양육자의 지정이 법원의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아동이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2007년 가족법 개정으로 협의이혼시에도 반드시 아동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정하여야만 이혼을 인정하게 되었고, 부모가 협의로 이를 정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아동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가족법에서는 아동의 권리라는 부분이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근의 가족법의 화두는 남녀평등에서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양자도 家를 위한 양자에서 양자를 위한 양자로 바뀌고 있는 것도 그 실례입니다. 다만 김용화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동의 의견개진권에 대하여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하나의 제도가 시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순작용 및 부작용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에 규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제 기우였으면 합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여 목표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방향의 설정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 및 그 정책을 이루어 내겠다는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천의지가 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동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권보호의 개별 문제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실천의지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본 학술대회의 목표와 같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할 아동정책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연구의 방향측면에서 보면 선언적인 주장이나 정책적 방향제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효과적이고, 그 제도의 실행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구체적인 실행내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아동(일반적인 아동이든 다문화 가정 아동이든 장애아동이든 상관없습니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완비와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지원 및 이 모든 것을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필요할 것입

니다.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양육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 및 지원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면 그 실행을 위한 의지가 얼마나 담보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언적인 정책의 방향제시보다는 정책당국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동학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는 아동학에 무퇴한인 토론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론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제시로 접근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례로 법학에서도 그러한 자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규정을 해석하는데 그치고 자신의 법해석이 얼마나 논리적인지에 관한 지적 유희적인 모습도 없지 않았습니디. 법규정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해석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숲을 보고 연구는 하였어도 개별적인 나무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실정을 모르는 자신만을 위한 연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자신의 연구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방향제시에 대하여는 많은 점을 배웠고 동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느끼는 점은 발표시간과 지면의 제약상 이해도 되지만, 학술대회의 목적에 맞게 현상황의 분석과 방향제시와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과 아동권 보호를 위한 대안제시도 같이 이루어 졌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 포스터 논문 ◆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발달 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광혁 · 김동관*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주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김 세 영*

(명지아동가족심리치료연구센터 연구원)

남북한 창작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 내용분석

손혜림 · 김영주* · 장수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석사,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울산시 교육청 어린이집 원장)

모래상자치료가 도벽과 거짓말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김재옥* · 김경희

(전남장애아발달심리지원센터장,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통합적 미술활동이 유아의 신체 및 그림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엄미경 · 김영주* · 장수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석사,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울산시 교육청 어린이집 원장)

출산전후 양육지원제도의 효과분석 :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윤재석 · 이완정*

(인천광역시청,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

◆ 포스터 논문 ◆

예비 보육교사와 현직 보육교사에게 나타난 아동권리 인식 조사연구

이 미 나*

(광주보건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마음챙김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분리불안에 미치는 효과

이복순* · 김경희

(동강대학교 외래교수,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모래상자놀이치료가 시설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이선희* · 김경희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이진희* · 이미향 · 이영호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정에서의 아동권리존중 실행

장지현* · 이완정

(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 경향분석

- 2000년~2010년도 논문을 중심으로 -

이진숙 · 전은청* · 이해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유진 · 정민정*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발달 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광혁 · 김동관*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서과정)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측정할 지표(9문항)를 분석에 사용하여 건강의 측정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발달 단계별 영향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전주시의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와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과 부모 6002쌍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에 조사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건강을 9개의 문항으로 조사한 문항(4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빈곤여부이다. 빈곤여부는 욕구소득비(월평균 가구소득/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기초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과정변수는 방임, 부모우울, 부모감독, 부모자녀애착이 포함되어있다.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 가운데 방임(4개 문항)과 부모우울(8개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모감독과 부모자녀애착의 경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밖에 통제변수로는 가족구조(한부모가정(1), 양친부모가정(0)), 아동성별(남자(0)와 여자(1)), 부모의 학력(대입이상미만(0)과 대학입학이상(1))으로 측정되었다.

3. 연구결과

1) 빈곤여부에 따른 건강 차이(t-검증)

빈곤여부에 따라 아동건강 문항을 비교한 결과이다. 아동 건강 관련 문항을 T-test를 활용하여 빈곤과 비빈곤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등과 중등의 경우 집단 간에 대부분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문항을 합하여 비교한 결과 초등($p<.001$)과 중등($p<.001$)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발달 시기에 관계없이 빈곤한 아동은 빈곤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빈곤여부에 따른 과정 변수의 차이(교차분석) :

아동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전달하는 과정 변수로 알려진 방임, 부모감독, 부모자녀애착, 부모우울 등을 빈곤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초등의 경우, 부모감독($p<.01$), 부모자녀애착($p<.001$), 부모우울($p<.001$)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감독($p<.001$), 부모자녀애착($p<.01$), 부모우울($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3)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초등과 중등 모두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중학교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모형 I 에 방임, 부모우울, 부모감독, 부모-자녀 애착 등 과정변수를 추가하자 빈곤이 건강에 미친 영향은 초등과 중등모형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중학교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영향은 방임, 부모, 우울, 부모감독, 부모-자녀 간 애착 변수 등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과정변수 중에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나 부모-자녀 간 애착 변수가 상대적으로 주요한 과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빈곤은 아동의 건강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특히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부모의 감독정도나 부모-자녀 간 애착 등의 변수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환경,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증거시적 개입 또는 양육행동에 대한 미시적 개입 등을 통해 빈곤아동의 건강 향상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ey Words : 빈곤, 아동, 건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김 세 영*

(명지아동가족심리치료연구소 연구원)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현실요법과 집단미술치료의 요소를 접목한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서울 소재 B중학교 2학년생 287명중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18명을 선정하여 이중 8명을 실험집단에, 10명을 통제집단에 배치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사후 검사에는 김용래가 제작한 ‘학교적응 척도’와 김아영이 제작한 ‘한국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제작은 문헌연구, 프로그램 구안, 프로그램 구성의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2010년 11월 18일까지 주 2회에 걸쳐 매회 80분 씩 총 10회 동안 학교의 다목적실에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사후 검사를 거쳐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모수 검정인 맨 휘트니 유(Mann-whitney U) 검정과 윌콕슨 부호 순위(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참가자의 일대일 심층 면담과 집단 내 행동관찰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및 개인 내적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검증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사전, 사후 점수 차이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8명 모두 학교적응($z=-2.52, p<.01$)과 자기효능

값($z=-2.52$, $p<.01$)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반면,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층면담과 집단 상황에서의 행동특성 관찰에서도 실험집단 구성원들은 보다 적응적이고 높은 자기효능감의 행동 특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4. 결론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해 개발된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학교적응 및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에게 적합함을 의미하며,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Key Words :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학교부적응,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남북한 창작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 내용분석

손혜림 · 김영주* · 장수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석사,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울산시 교육청 어린이집 원장)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창작동화를 통하여 남북의 다른 경제체제에 따른 경제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경제활동 동질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해 한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북한 창작동화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성(등장인물, 주인공의 성별, 연령, 사회계층, 부모관계, 형제관계, 생활형태, 재산소유형태)은 어떠한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북한 창작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의 관련 어휘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의 동화가 함께 실린 동화집의 동화 113편이다. 연구 방법은 내용분석지를 사용하였으며, 내용분석지의 내용은 창작동화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부분과 남북한의 경제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경제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구는 김숙자·이혜승(2009)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의 창작동화에 나타난 경제 관련 어휘 사용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 관련 어휘를 살펴보면, 남·북한 창작동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폐 관련 어휘를 살펴보면, 전체 화폐의 평균은 남한 창작동화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희소성 관련 어휘에서 남·북한의 창작동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회비용 관련 어휘에서 남한 창작동화에서 “가난”의 어휘가 가장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북한 창작동화에서 “없다”의 어휘가 높은 평균이 나타났다. 교환 관련 어휘에서 “나누다”의 어휘가 남한 창작동화에 비해 북한 창작동화에서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다. 생산 관련 어휘에서 남

한의 창작동화의 경우, 직업에 관련된 어휘에서는 ‘전문·기술직’에 관한 어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의 창작동화에서는 농·축·임·수산업’에 관한 어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장 관련 어휘에서 “광고”, “사다”, “시장”, “팔다”의 어휘가 북한 창작동화에 비해 남한 창작동화에서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 전래동화를 분석하여 남·북한 경제체제가 서로 달라 벌어지는 경제개념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일된 후 남·북한 주민 간에 빚어지게 될 다양한 경제적 갈등 상황을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동질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모래상자치료가 도벽과 거짓말하는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김재옥* · 김경희

(전남장애아발달심리지원센터장,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연구목적

학교 적응과 도벽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에게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주고 일상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가족간의 원만한 사랑의 교류와 즐거운 일상생활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효과적이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모래상자치료 한 회기 과정은 연구 대상아동을 사전 검사 실시 후 병원치료실에 마련된 모래상자치료실에서 진행과정 중 아동의 행동과 언어, 반응 등을 관찰 기록과 함께 사진기록 하였다. 매 회기마다 De Domenico(1991)의 치료 단계에 근거하여 Boik 과 GoodWin(2000)이 발전시킨 ‘세계 만들기’, 함께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신이 만든 세계를 직면할 기회를 주었으며 질문과 응답, 공감적 이해, 연구자의 느낌, 지도감독 내용과 작품구성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3. 연구 결과

모래상자치료의 주제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기에는 풍성한 과일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표현하였으며, 자아가 생기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일하러 가는 어부는 자신의 무의식에서 변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하므로 행동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중반기에는 ‘생일’이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다시 태어나고 싶고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짐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하므로 또래관계와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본 연구의 문제행동이었던 도벽과 거짓말의 행동특성이 감소되는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후반기에는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것’이라는 작품과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투사하고 내면의 힘이 생기면서 원형 모양을 통해 자아가 성장하는 모습과 발자국, 자신의 존재가치, 흔적을 남김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을 하였다.

4. 결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많은 대상에게 모래상자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문제는 아동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 가족과 또래라는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교육, 교사교육 등을 병행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Key Words : 모래상자치료, 초등학교아동, 문제행동(도벽, 거짓말).

통합적 미술활동이 유아의 신체 및 그림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엄미경 · 김영주* · 장수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석사,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울산시 교육청 어린이집 원장)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미술 활동이 영유아의 다양한 표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유아교육 측면에서의 새로운 교수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통합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유아의 신체 표현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통합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유아의 그림 표현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실험집단 S 어린이집의 만 4세 20명, 통제 집단 H 어린이집 만 4세 20명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모든 유아에게 사전검사인 신체 표현력, 그림 표현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이 이루어진 후 실험집단에 통합적 미술 활동을 실시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는 일반적인 미술 활동이 진행되었다.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후 사후검사를 하였다. 실험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9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연구도구로는 공갑례(1997)의 논문을 토대로 하여 동작의 다양성, 방향성, 리듬성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표현력 검사 도구는 지성애(2001)의 그림 표현력 평가 척도가 사용되었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미술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신체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동작 다양성, 방향성, 리듬성, 신체 표현력 전체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미술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 동작의 다양성, 방향성, 리듬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통합적 미술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그림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합적 미술 활동을 시행한 이후 실험집단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의 사후검사 점수는 다양한 색채 표현, 조화로운 구성, 주제관련 표현, 그림완성, 그림 표현력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 세부적 묘사, 다양한 형체, 창의적 표현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합적 미술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신체 표현력, 그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다양한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 미술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나아가 유아에게 적합하고, 통합적 미술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출산전후 양육지원제도의 효과분석 :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윤재석 · 이완정*

(인천광역시청,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

우리사회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육지원정책은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되고 있다. 2011년부터 양육시설 이용료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였으며 양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국가책임을 높여가고 있다. 아울러 양육지원을 위한 출산휴가 및 남성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고용관련 정책들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지원제도와 재정투자의 확대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는지 실증적인 증거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의 재정투자는 증대되었으나 출산 수준은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개별 통계만으로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산전후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이 자녀의 임신, 출산 및 초기 영아기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양육지원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자료는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조사한 ‘2008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육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하였다. 독립변인은 영아관련 특성으로 정서성, 활동성을 투입하였고 어머니 배경변인으로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았다. 취업모 관련변인으로 근로시간, 직무만족도, 근로유형, 직장의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수준을 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의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 결혼만족도를 투입해 보았다. 더불어 양육관련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확인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 관련 변인으로 유아기관 충분도, 여가문화시설 충분도, 치안 및 위험예방 안전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어머니 배경변인 중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둘째,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취업모 관련변인 중 직장의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수준 변인이 가장 높은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는 취업복귀와 일·가정 양립정책이 요구도가 높고 효과가 큰 육아지원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육시설을 육아정책 및 아동별 육아비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직장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Key Words :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원제도, 육아휴직,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예비 보육교사와 현직 보육교사에게 나타난 아동권리 인식 조사연구

이 미 나*

(광주보건대학유아교육과겸임교수)

1. 연구목적 및 방법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에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 보육교사와 현직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예비 보육교사와 현직 보육교사에게 아동의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배경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보육교사 교육원에 재학중인 예비보육교사 162명과 보육시설에 종사한 현직 보육교사 149명 총 3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에 중요성과 실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구는 1989년 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이재연과 강성희(1997)의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연구에서 이용된 질문지로 중요도 40문항, 보육도 40문항 총 8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거쳤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일원변량분석과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예비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1.1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현직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실제 보유한 권리에 대한 예비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2.1 아동이 실제 보유한 권리에 대한 현직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권리에 대한 예비 보육교사의 인식과 현직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1989년 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1993년 Hart와 Zeidner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 : Early Finding of a Cross National Project' 통해 개발한 문항을 기초로 한 이재연과 강성희(1997)의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연구에서 이용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아동권리협약의 3원칙인 제공, 보고, 참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내용은 권리의 중요성인식과 실제보육하고 있는 권리의 인식정도로 나누어져 각 40문항씩 모두 80문항이다.

4. 연구결과

첫째, 예비 보육교사와 현직 보육교사들은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집단 모두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위권리는 아동의 건강하게 자랄 권리,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재해로부터의 즉각적 구조, 아플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서비스, 의사존중의 권리,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의식주를 걱정 없게 해주는 생활수준유지라고 하였다. 반면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항목으로는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전쟁비참가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권, 책임있는 청년기 교육권,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공부할 장소를 갖는 권리, 종교선택의 자유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 보육교사와 현직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아동들의 권리보유정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보육점수가 높게 보인 권리 항목은 기분이 언짢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권리, 부모로부터 비분리, 의료지원서비스, 건강하게 자랄 권리, 생명 존중권, 의식주를 걱정 없게 해주는 생활수준유지, 성인의 관심과 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들이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권리 항목은 고유한 생각의 권리, 경제적 권리, 시민적 자유권, 부모로부터 독립권, 종교선택의 자유권, 교육적 원조 및 제공, 정보제공권, 전쟁 비참가권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직 보육교사들에 비해 예비 보육교사들에게 나타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 권리, 부모로부터 비분리, 성인의 관심과 지도, 의료지원서비스, 건강하게 자랄 권리, 생명 존중권, 그리고, 의식주를 걱정 없게 해주는 생활수준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들이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권리 항목은 고유한 생각의 권리, 경제적 권리, 시민적 자유권, 부모로부터 독립권, 종교선택의 자유권, 교육적 원조 및 제공, 정보제공권, 전쟁 비참가권 등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아동의 자기 결정권이나 자율권에 관계된 내용보다는 생존이

나, 보호 양육에 해당되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로 볼때 예비 보육교사들 보다 현직 보육교사들에게서 아동과 매일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직무적스트레스등의 요인으로 아동권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아동의 발달이나 환경, 시기에 맞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보육태도와 유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한 유아교육기관인 보육시설 내에서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Key Words : 예비보육교사, 현직보육교사, 아동권리, 아동권리인식.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마음챙김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분리불안에 미치는 효과

이복순* · 김경희

(동강대학 외래교수,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연구목적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마음챙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분리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K시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의 참가신청을 원하는 어머니 30명에 대한 동질성을 고려하여 15명은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다음 15명은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 도구는 박성현(2006)의 마음챙김에 대한 현재자각과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및 탈중심적 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와 유아에 대한 애착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양애경(2006)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분리불안 척도는 안순조(2002)가 개발한 유아분리불안 교사 평정척도를 한미옥(2004)이 어머니 평정척도로 수정·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음챙김, 애착안정성, 분리불안을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실시하여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첫째,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마음챙김 수준의 향상에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어머니의 주의집중이 통제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셋째,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어머니의 비판단적 수용이 통제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넷째, 마음챙김 명상 프

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어머니의 탈 중심적 주의가 통제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다섯째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여섯째, 어머니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체험을 통하여 유아의 분리불안의 감소에 효과적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복잡한 현대를 사는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서안정을 위한 마음챙김을 안내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역할을 채길 수 방법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실제적으로 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음챙김 수준이 향상되고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증진되고 분리불안이 감소하였다.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행복한 가족관계와 어머니 역할의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Key Words : 마음챙김, 명상, 애착안정성, 분리불안.

모래상자치료가 시설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이선희* · 김경희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설아동이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인식하고 모래상자놀이치료를 적용하여 불안과 위축된 심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모래상자놀이치료, 사후검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모래상자놀이치료의 한 회기 과정은 De Domenico (1989)의 치료 단계에 근거하여 Boik과 Goodwin(2000)이 발전시킨 ‘세계 만들기’, ‘경험하고 재배열하기’, ‘치료’, ‘사진찍기’, ‘전이’, ‘분해하기’의 6단계에 따라 30회기를 진행한 후 양적분석을 하고 질문과 응답, 공감적 이해, 연구자의 느낌, 지도감독 내용과 작품구성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였다.

3. 연구 결과

두 집단 간 자기표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자기표현이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p < .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변인별 사후검사에서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적 요소, 체언적 요소는 $p < .01$ 수준, 음성적 요소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사회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성이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p < .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변인별 사후검사에서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준범성, 협동성, 자주성은 $p < .05$ 수준에서 사교성은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을 살펴본 결과, 경계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모습이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변화를 보이며 짧고 간결한 문장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지는 등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긍정적 언어의 사용이 증가 되었다.

4. 결론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모래상자놀이치료는 시설아동의 표현능력과 표현의욕을 자극하여 내면의 심리상태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표현 및 자기노출이 위축되거나 억압된 성향을 가진 시설아동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마음대로 모래 위에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에너지를 자극하여 자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어 자신과 자신, 자신과 타인의 관계증진으로 인한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ey Words : 모래상자치료, 시설아동, 자기표현, 사회성.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이진희* · 이미향 · 이영호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1. 연구목적

жат은 병원 입원이나 장기간 통원치료를 요하는 건강장애학생들이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지원방법의 하나로서 병원학교가 설립,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치료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2005년도부터 201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전국 병원학교 년도 별 학생 및 운영현황을 및 형태를 알아보고 현재 병원학교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교육방법과 운영방침에 따라 실제 운영방법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병원학교 중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새로이 신설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3개의 대학병원 병원학교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국내 병원학교는 1999년도에 병원자체에서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세브란스병원이 설립되었으나, 이 당시는 장기 입원한 환자들의 여가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유급문제나 또래 관계유지 등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4년도에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교육청에서 직접관여 하기 시작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병원학교가 설립되었고 수도권에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2005년도에 성동교육청으로부터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의 유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시작함으로써 현재의 전국적인 병원학교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다.

4. 결론

병원학교라는 제도적 지원은 받고 있지만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현직교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청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원적학교 선생님들의 자원봉사 교육에의 참여, 혹은 또래 친구들의 방과 후 동반학습 권장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소아암과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 아이들에 대한 현시점과 이해, 관심의 전환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병원 내에 있는 병원학교 교육적, 심리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확대시키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는 바이다.

Key Words : 병원학교, 건강장애, 특수교육.

유아에 대한 가정에서의 아동권리존중 실행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장지현* · 이완정

(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가정에서 아동권리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실재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도구를 구성하고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기 자녀를 위한 아동권리 실행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가정에서 유아기 자녀의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행동은 일반적으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존중 실행 정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양육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아동권리존중 실행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만3세~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3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권리존중실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은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권리 존중의 전체 실행정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권리존중 실행정도를 살펴보면 독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가 1명인 독자의 경우 아동권리를 더 잘 존중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권리 존중실행 정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권리 존중 실행정도는 높았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실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동권리 존중 실행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존중실행정도는 양육효능감 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 경향분석

- 2000년~2010년도 논문을 중심으로 -

이진숙 · 전은청* · 이해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1. 연구목적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적 기법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왔으며, 아동의 즉각적 분노대처에 초점을 두고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미경,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 연구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분노조절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적절하고, 또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 대상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형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 대상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 대상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른 효과성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분노조절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연구 발표된 논문 총 38편(학위논문 32편, 학술지 6편)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논문에서 추출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론

1) 아동대상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10명 이하의 소집단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10~12회기로 구성되어 이루어졌다. 대상은 고학년(4~6학년)이 많았으며, 회기 진행시간은 60분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2) 아동 대상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주된 구성내용은 인지행동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다양한 프로그램(독서, 용서, 감사, 치료놀이 등)이 접목되거나 독자적으로 나타났다. 31편의 인지행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분노지연, 사고전환, 행동변

화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기법으로는 ‘나 메시지’, 이완/호흡 기법(분노지연),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하기(사고전환), 경청과 공감(행동변화)이 많이 사용되었다.

3) 효과성을 보고자 한 종속변수는 크게 또래관계, 분노, 공격성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래관계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였으며, 분노는 분노조절과 표현에는 효과가 있으나, 분노억압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격성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 적의성/원한에 대한 감소, 간접적 공격성은 유의하였으나, 언어적 공격성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Key Words : 분노조절프로그램, 아동, 인지행동프로그램.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유진 · 정민정*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1. 연구목적

새터민 아동은 탈북 과정과 제 3국에서 남한으로 이주하는 과정, 정착 후의 다양한 심리적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춘기에 수반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경우 일반 청소년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볼 때 새터민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책을 매체로 하여 저항이 적으며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방어를 최소화하여 정서적 어려움과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새터민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터민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서울시 A구 복지관의 방과 후 공부방에 참여하는 새터민 아동 중 남한 정착기간 1년 미만 아동 8명을 단일집단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도구 : 문용린(1996)이 제작한 초저용(1~2학년) 정서지능척도, Gresham과 Ellitt(1990)의 아동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SSRS)를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 프로그램은 도입단계, 탐색·인식단계, 문제해결 I 단계, 문제해결 II 단계, 종결단계로 이루어졌다. 복지관의 집단교육실에서 2009년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주간 총 17회기로 구성하여 주 1회(70분), 하계방학인 8월에 한하여 주 2회 진행하였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보조진행자가 각 회기마다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대상 아동 중에서 1회 이상 불참한 새터민 아동 1명을 제외한 총 7명을 최종분석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비모수검정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3. 연구결과

첫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대상자들의 전체 정서지능($Z=-2.366, p<.05$)과 하위요인 정서인식,

감정이입 및 정서조절에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표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전체 사회적 기술($Z=-2.366, p<.05$)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단계에 따른 새터민 아동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과 의견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새터민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졌다.

4. 결론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새터민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표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조군을 구성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급증하는 새터민 아동들의 심리적 문제와 적응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에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추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새터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치료적 개입은 2달간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나 이들의 정서적 문제는 짧은 기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정착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지원의 제공 또한 필요하다. 새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관이나 정착 지원 센터, 학교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Key Words :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 새터민 아동, 정서지능, 사회적 기술.